

KINU 통일나침반 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2016. 03.

KINU 통일나침반 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 03.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 참여진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 론	1
II. 북한의 핵실험 배경 및 반응	2
1. 4차 북핵실험의 배경과 의도	2
2. 북한의 핵능력	8
3. 북한의 반응	16
III. 각국의 정책적 대응	21
1. 한국의 대응	21
2. 국제사회의 대응	25
IV. 향후 정세 분석 및 전망	56
1. 북한 내부 차원	56
2. 남북관계 차원	61
3. 동북아 차원	64
V. 정책적 고려사항	70
부록: 4차 북핵실험에 대한 주변 4강의 반응	75

I. 서론

- 1.6. 4차 핵실험 감행과 함께 북한 관련 정세의 새로운 국면이 개시
 - 이 국면은 1.6. 4차 핵실험, 2.7. 장거리 미사일 실험 감행과 같은 북한 측의 도발로 시작
 - 이에 대해 3.2.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270 채택을 거쳐 3.8. 한국의 독자 제재안 공표로 한 국면이 일단락

- 1.6.~3.8. 기간 국면의 특징
 -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해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맞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임.

- 대북 제재안의 성립, 그리고 3.7. 한미연합훈련의 개시와 함께 남북관계는 새로운 긴장 국면으로 진입

- 본 보고서의 목적과 내용
 - 2016.1.6. 북한이 실시한 4차 핵실험, 2.7.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유엔 제재안 합의, 그리고 한국이 독자제재를 발표하는 3.8.까지 과정을 분석하고 한반도 정세의 향후 추이를 전망

II. 북한의 핵실험 배경 및 반응

1. 4차 북핵실험의 배경과 의도

가. 전략적 차원

- 4차 북핵실험은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노선인 경제·핵 병진노선에 따라 단행
 - 북한은 2008년 6자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따른 북핵 무시, 한국의 정권교체에 따른 남북합의 실효성 약화, 이라크·리비아의 정치변동 등을 이유로 ‘김정일식 북핵협상’에 대한 전면적 검토에 돌입했음.
 - 그 결과 북핵협상을 ‘협상을 통한 확산’에서 ‘확산을 통한 협상’으로 전환하였음. 즉, 협상을 해보다 안 되면 핵활동을 재개하고 이후 다시 협상장에 돌아오던 방식에서 단기간에 핵능력을 증강시킨 후 보상 단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했음.
 - 이러한 전환의 결과가 국가전략화된 것이 2013.3. 채택된 경제·핵 병진노선임.

- 병진노선은 덩샤오핑의 ‘양탄일성(兩彈一星)에 근거한 경제발전노선’의 김정은식 버전
 - 중국은 1964년 원자탄 실험, 1967년 수소탄 실험, 1970년 인공 위성 발사에 성공해 양탄일성을 달성했음. 이 성과로 중국은 더 이상 소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고 미국과의 데탕트 시대를 열어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음.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양탄일성이 있었기에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강조한바 있음.

-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수소탄 실험으로 양탄일성을 갖게 되어 체제안정이 상당부분 보장된 셈. 병진노선 논리라면, 이제는 경제에 집중해야 함. 그래서 4차 북핵실험 이후 북한 언론은 “수소탄 시험, 북한식 경제부흥 본격화 신호탄”, “수소탄 시험으로 경제강국 건설 길 열려” 등의 주장을 연일 보도하고 있음.

○ 1960년대 중국과 2010년대 북한 간 분명한 차이 존재

- 1960년대에는 냉전과 핵경쟁으로 핵개발에 대한 제재가 상대적으로 약했고 중소갈등과 미중대타트의 반전이 가능했으며 중국은 대국이었음.
- 2010년대에는 NPT체제하 핵개발에 대한 국제제재는 상당하며 북한은 소국임.

나. 목표적 차원

○ 첫째,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 지위 굳히기

- 북한은 2012년 헌법 전문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기한 데 이어 2013.4.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관련 법령을 채택하여 핵보유를 국내법으로 ‘영구화’하는 조치를 취했음.
- 그리고 지금까지 핵능력 고도화를 통해 국제사회가 핵보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려 했음. 그 결정판이 이번 ‘수소탄 실험’임.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수소를 이용한 증폭핵분열탄 실험이라는 것이 증론임.
- 또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핵무기 소형화와

운반수단이 중요함.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2015년부터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2016년 2월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단행하였음. 북한은 주기적인 핵실험과 투발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핵능력의 고도화를 과시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강탈하려 함.

-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 공식 인정은 동북아 핵도미노 현상을 야기하여 안보지형을 불안정하게 하므로 국제사회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

○ 둘째, 대미 협상력 제고

- 미국을 협상장으로 이끌어 내고자 함. 2012년 2·29합의 결렬을 전후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 정책을 강화하면서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에 북핵을 올려놓지 않았음.
- 이에 북한은 2015년 벽두부터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대미 공세를 취하다가 10월에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본격적으로 주장하였음. 급기야 북한은 한미정상회담 직후인 10.17. 외무성 성명에서 한반도 평화보장 방법은 두 가지 뿐인데,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것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 중 양자택일 하라고 미국을 압박했음.
- 북한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16년이 미국을 자극하기에 적기로 생각했을 것임. 실제로 이란과 쿠바에 집중되었던 미국의 관심이 북한에도 옮겨갔음. 핵실험 이후에는 연일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면서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게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으박지르고 있음.
- 그러나 쿠바와 이란에서 외교적 성과를 거둔 미국은 북한이 선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북미협상이라는 도박을 하지 않을 것임.

○ 셋째, 대중 주도권 확보

- 시진핑-김정은 시기 북중관계는 취약성과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음. 특히 김정은은 자신에게 개혁개방과 북핵폐기를 요구하면서도 자신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시진핑에 대해 불만임. 과거 김정일은 중국을 7번 방문한바 있음.
- 2015.10. 류윈산(劉雲山)이 북한 노동당 창당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면서 북중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2015.12. 북한 모란봉 악단의 북경 공연 취소로 곧 냉랭해졌음.
- 2015.12.29. 노동신문이 8월 사태 시 “일부 유관국들은 우리와 적대세력에게 냉정성과 자제력을 구하면서 중립을 지켰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에 대한 불만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음. 2016년 김정은 신년사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듯 ‘자강력 제일주의’가 불쑥 나왔고 예전과 달리 핵실험에 대해 중국에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음. 또한 핵실험 이후 당 창건 70주년 기록영화에서 류윈산을 삭제하기도 하였음.
- 이러한 맥락에서 4차 북핵실험은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음. 중국 내에서 북한의 ‘전략적 자산론’ 대 ‘전략적 부담론’의 논쟁을 보면서, 오히려 북한은 극도의 긴장 고조가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 전략적 부담을 증가시켜 자기의 존재이유를 증명하려는 ‘전략적 부담의 자산화’ 방법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임.
- 그러나 중국은 극한 조치는 취하지 않더라도 이전보다는 더 실효적이고 강한 제재에 동참하고 있음.

○ 넷째, 대남 주도권 확보

-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밀리면서 불안감과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었음. 북한은 통일준비와 전단 살포, 확성기 등을 거론하며 체제통합, 흡수통일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임. 지난 8·25합의는 북한으로선 우리의 원칙적 대북정책에 대한 굴복으로서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임. 더구나 북한은 이산가족상봉과 남북교류 확대의 보상을 기대했으나 제1차 남북당국회담이 결렬되자 강한 불만을 드러냈음.
- 이에 우리 정부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할 충격적인 도발이 필요했을 것임. 또한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대북정책의 실패를 보여주고자 했을 것이고 이에 따른 남남갈등도 기대했을 것임.
-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응은 매우 단호함. 대통령은 핵실험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면서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북한이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고 공언했고,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국제사회의 대응이 이전과는 달리,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음.
- 우리 정부는 4차 북핵실험을 계기로 동북아 안보지형이 북한에게 매우 불리하게 변해가고 있고 북핵문제는 북한문제의 해결과 연동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면서, 대북제재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음.

○ 다섯째, 김정은 치적 과시

- 제7차 당 대회 성공의 원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백두혈통 세습이라는 태생적 정당성에 집중했던 김정은은 집권 5년차를 맞아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줘야 함. 그런데 북

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거론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많다고 자인하고 있음.

- 김정은이 제7차 당 대회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핵능력의 고도화뿐일 것임. 실제 북한에서는 ‘수소탄 실험 성공’ 경축행사를 평양에 이어 지방의 시군까지 잇달아 개최하고 수소탄 관련 시와 노래를 보급하면서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김정은의 업적을 찬양하고 있음.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 개막의 성과로 수소탄 실험을 들고 있는 것임.
- 결국 북한은 수소탄 실험을 김정은의 성과로 내세우면서 제7차 당 대회를 경제비전을 결의하는 장으로 만들고자 할 것임. 그리고 당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소탄은 노력동원의 기제로 활용될 것이고, 또한 인적쇄신과 정책변화에 따른 패배자들의 저항을 제압하는 효과로도 의미가 있을 것임.

다. 계기적 차원

○ 전략적 결심과 즉흥적 판단의 중첩

- 북한은 2015년 내내 핵실험 택일을 고민했을 것임. 그러다 12.12. 남북당국회담이 결렬되고 모란봉 악단이 베이징에서 철수하자 결단을 내린 것 같음.
- 이산가족상봉 및 남북교류 확대를 8·25합의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남측이 금강산관광 재개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류원산 방북 시 보여준 모란봉 악단 공연내용이 베이징에서는 문제가 되자 김정은은 곧바로 핵실험 진행 명령을 내렸다는 후문임.

○ 1.6. 핵실험은 1.8. 김정은 생일, 2.7.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2.16.

김정일 생일과 연관성

- 북한에서 핵보유 및 핵고도화는 김정일의 권력승계·과시 과정과 연결됨.
- 2009년 제2차 핵실험 즈음金正은 후계자로 지명되었고, 2013년 3차 핵실험 전에金正은 정권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으며,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金正은의 자기 정치가 본격적으로 구동될 것임.

2. 북한의 핵능력

가. 북한 핵/미사일 능력 추정

- 북한의 핵능력은 크게 (1)핵탄두 제조능력, (2)투발수단(탄도미사일) 능력, 그리고 (3)실질적 작전배치 능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핵탄두 제조능력: 일정 수준 이상의 폭발력(20kt 내외)을 지닌 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
 - 투발수단 능력: 정해진 목표까지 재래/핵/화생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정확성/사거리를 지닌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 실질적 작전배치 능력: 500kg~1t까지 핵탄두를 소형화하여 투발수단에 적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화된 형태로 전력을 구성하는 능력(소형화다종화)
- 일단 핵탄두 제조능력과 관련, 다수의 자료들이 복수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해 왔음.
 - 『국방백서 2014』는 북한이 이미 40kg 가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기술로는 6~7개, 신형기

술로는 10개 내외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

- 민간 비핵운동 단체인 'Plughshare Fund'는 2014년 기준으로 북한이 10개 미만의 핵 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 일부 전문가들은 10개 이상의 핵탄두 보유도 상정 가능하다고 평가

- 신성택, 전성훈은 2000년대 초·중반 이미 10개 이상의 핵탄두 보유 가능성을 예상했으며,

- 그 이후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영변시설에서의 8000개 폐 연료봉 재처리(7kg의 플루토늄 추출 가능) 등을 감안하면 현재 더욱 증가 추정

- 미 SAIS의 조엘 위트의 경우 현재 이미 10개~16개, 최악의 경우 2020년까지 100개의 20kt급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고 평가

○ 탄도미사일 능력에 있어서도 이미 기존 핵보유국들에 준하는 수준의 기술적 진보를 이룬 것으로 판단

- 단거리 미사일: KN-02(160km 내외), SCUD C/D(300~500km) 작전배치

- 단·중거리 미사일: '노동' 미사일(1,300km 내외) 작전배치

- 중거리 미사일(IRBM): '무수단' 미사일(3,000km 내외) 작전배치

- 제한대륙간탄도미사일(LR-ICBM): KN-08(6,000~7,000km 추정) 군사 퍼레이드 등장

-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대포동' 계열(II형 기준으로 완성시 10,000km 이상 가능)의 미사일을 1998년~2016년 간 현재 6차례 실험

-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2015년 중 2차례 사출시험
- 실질적 작전배치 능력의 경우, 소형화·다중화와 비용이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는 여전히 의문
 - 탄두 제조능력과 투발수단 탑재능력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 두 가지가 해결되어야 진정한 작전배치가 가능
 - 즉, 이미 작전배치 중인 '무수단' 계열에 배치하려 해도 500kg 정도로의 탄두 소형화가 필요하며, SCUD나 '노동'에 탑재할 경우 700kg~1t으로의 소형화가 요구됨(IISS, SIPRI 등의 payload 기준 감안)
 - SLBM의 경우 단순한 사출시험 및 잠수함 탑재 성공으로 작전배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에 맞는 원양항해형 대형잠수함이 필요함.
- 북한이 한반도, 아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핵 위협을 가하려 할 경우 소형화·경량화 기술로만 충분하지만, 미국의 핵 보복에 대한 억제력을 추구한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막대한 비용 소요
 - 미국의 긴급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에서 생존하기 위해 순수하게 15개 내외의 대포동 미사일을 제작·작전배치하는 데에만 최소 1조원(북한 1년 국방비) 이상이 소요
 - SLBM을 발사할 대형잠수함 2척의 건조비용에도 비슷한 금액이 요구됨.

나. 능력 측면에서 본 4차 핵실험/6차 미사일 실험의 함축성

- 물론, 북한 핵무기의 위력이나 소형화·다중화 능력은 단순한 이론적 탄두 제조수량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으며, 이에 상응하는 폭발력이 보장되어야 함.
 - 위의 탄두 제조능력은 가용한 비축량(stockpile)만을 중심으로 판단한 것이며, 이렇게 제조된 핵탄두가 제대로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 실제 핵탄두가 ‘핵무기’로서의 위력을 지니려면 일정수준 이상의 폭발력이 나와야 하며, 신뢰성 있는 투발수단에 적재될 수 있어야 함.
 - 거듭된 핵실험 및 ‘수소탄’ 발사실험은 지속적인 핵능력의 확장 측면에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예상보다 북한의 핵폭탄 위력이 낮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함.

- 이러한 점에서 4차례의 핵실험에서 나타난 폭발력은 무기화한 일반 핵폭탄의 20kt 위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임.
 - 1차 핵실험: 1kt 미만 추정(지진파 3.9)
 - 2차 핵실험 3~4kt 추정(지진파 4.5)
 - 3차 핵실험: 6~7kt 추정(지진파 4.9)
 - 4차 핵실험: 6kt 내외 추정(지진파 4.8)

- 더욱이, 4차 핵실험의 경우, 북한이 주장한대로 ‘수소탄’이라면 일반적 ‘핵분열탄’보다 더 큰 폭발력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발력은 오히려 줄어들었음을 감안하면 북한의 실제 핵능력에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음.

- 이로 인해 많은 국내 및 해외의 분석가들이 순수한 ‘수소폭탄’이라면 실험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함.
 - 일부 전문가들은 애초 ‘증폭핵분열탄(boosted fission weapon)’을 ‘수소탄’으로 과장한 것이었으며, 이를 가상한다면 절반 정도의 성공이라고 평가하기도 함.
 - 다만, 핵 공학자들을 중심으로 북한이 기존의 핵분열 기술과는 별도의 핵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소한 그 중간 단계에 와 있다는 반증이 이번 핵실험에서 나타났다고 평가하기도 함.
- 그러나, 이미 기존의 핵실험부터가 외부의 반발을 의식하여 핵폭발 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됨.
- 북한이 제한된 양의 플루토늄만을 사용하여 애초 폭발력을 조절하였고, 핵실험지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지형이 화강암 암반 위주여서 지진파가 덜 발생하였다는 분석
 - 이는 북한이 이미 소형화(폭발력 조절)의 노하우를 터득하였음도 동시에 암시하고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북한의 핵능력은 이미 상당 수준이며 1998년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하였다고 주장한 인도에 비견되는 능력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가능
- 결국, 4차 핵실험과 6차 미사일 실험은 북한의 의도와 능력, 그리고 결과를 감안할 때 세 가지의 가능성을 모두 남기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론상 “완성된 핵능력+실패”의 조합도 가능하지만 크게 의미가 없어 제외

- 시나리오 1(미완성 핵능력+사실상 실패): 북한이 애초 불완전한 핵능력을 가지고 위력을 과장해 왔으며, 이번 실험도 사실상 그를 반영해 실패로 끝남.
 - 시나리오 2(미완성이거나 점진적으로 진보되는 핵능력+절반의 성공): 북한의 핵능력이 여전히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계속 진전되고 있으며, 이번 실험 자체도 그의 연장선상에서 해석이 가능함.
 - 시나리오 3(완성된 핵능력+완전한 성공): 북한이 이미 상당한 소형화다중화 기술을 획득하였으며, 이번 실험에서도 제한된 폭발력만을 시현하였으며, 투발수단의 능력은 충분
- 우리 입장에서 최선의 시나리오 순으로 배열하면 ‘시나리오 1(최선) > 시나리오 2 > 시나리오 3(최악)’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가능성 면에서는 ‘시나리오 2 > 시나리오 3 ≥ 시나리오 1’일 가능성이 큼.
- *20년 이상의 북한 핵개발 노하우를 감안할 때, [시나리오 1]의 가능성은 가장 낮음에 유의

다. 향후의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예상 경로

- 주목해야 할 것은 위의 세 가지 시나리오와 앞으로 북한의 대응이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임.
- 최선(시나리오 1)의 경우: 북한의 능력 자체가 부재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북한이 단기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안과 한국 및 주변국의 자체 제재에 강력 반발할 것이지만, 결국은 대화와 타협의 자리에 나올 것임. 거듭 실패로 끝난 핵실험을 추가로 실행할 가능성이 낮음.
 - 중간(시나리오 2)의 경우: 북한의 입장에서 강경대응과 타협을 시

도할 여지가 모두 존재함. 핵능력 개발에 중점을 둘 경우에는 추가 핵실험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지만, 제재 부담에 중점을 둘 경우에는 오히려 모라토리엄(핵실험/미사일 발사 유예)을 선택할 수도 있음.

- 최악(시나리오 3): 이미 충분한 핵능력을 갖춘 경우이므로, 강력한 대북제재에 대한 역풍(逆風)으로 추가 핵실험(2차 ‘수소탄’ 실험, 혹은 추가적 장거리 로켓 발사실험) 가능성이 충분함. 이 경우 기존보다 훨씬 뛰어난 폭발력을 시현할 것이며, 핵능력 과시를 통한 정면돌파(강성대응)를 계속 선택할 가능성이 큼.
- 현 시점에서 [시나리오 1]의 경우 우리의 별다른 조치가 없이도 북한의 입장 전환이 예상되며, [시나리오 3]의 경우 동맹체제를 통해 억제·보복 능력 강화를 모색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음.
- 반면, [시나리오 2]의 경우에는 북한의 다음 수순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시나리오 2]하에서 북한이 지속적인 핵실험의 일상화를 선택한다면, 5월로 예정된 7차 노동당 대회 이전에도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것임.
 - 제재에 관계없이 일단 핵능력을 완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인식 하에 이와 관련된 능력을 집중 시현(미사일 발사 실험은 준비기간의 한정성 상 무리가 있음)
 - 7차 당 대회에서 ‘핵 강성대국’의 실현과 ‘경제력과 핵능력의 병진’ 중 핵능력 완성을 김정은의 업적으로 집중 선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경제적 부진은 외부의 ‘압살정책’ 탓으로 돌릴 수 있음.

- 계속 핵 관련 능력을 과시해 나가면 기존 핵보유국들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국제적인 관점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fait accompli)할 수 있다는 계산하에, 일단은 강경노선 선택

○ 반면, 북한이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을 시도할 경우, 7차 노동당 대회를 기점으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도 있음.

- 이미 주민들에게는 ‘수소탄’까지를 보유한 강성대국의 면모를 과시했으므로, 이 상태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더라도 크게 위신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판단
- 즉, 제재에 굴복하여 모라토리엄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핵보유국’의 대승적 입장에서 자제한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임.
- 이와 함께 반대급부로 미북 평화협정(미북 핵군축 협상 포함),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즉, 모라토리엄 선언과 협상국면으로의 전환은 2016년 이후의 중기적 포석까지를 염두에 둔 것임.

- 1년 정도의 고강도 제재를 버티면, 2017~2018년 한미의 행정부 변화를 기점으로 새로운 협상국면을 개척한다는 수순
- 이에 따라, 모라토리엄 선언 직후부터 평화공세 및 협상국면으로의 전환을 시도할 것이며, 핵동결 조치 및 일정한 국제적 검증(IAEA 사찰 등)을 추가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
- 북한이 보다 유화적인 자세로의 전환을 모색할 경우, 로켓 발사

실험 없이도 7차 당 대회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를 감안할 때, 한국의 입장에서는 현 단계에서의 제재의 실효성 추진 강화와 함께 어떤 단계와 조건에서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병행할 것인가의 기준을 확립해야 함.
 - 북한의 입장변화 이전에는 현 유엔 제재 결의안의 실제적 이행을 보장할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개별 회원국 차원의 2차 제재 (secondary boycott)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중하는 데 주력
 - “북한의 어떤 조치를 대화를 통한 협상 전제조건으로 충족으로 간주할 것인가?”(모라토리엄, 핵동결, 비핵화 로드맵 제시 등)에 대한 우리 자체 계획을 정립하고, 이를 주변국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 경주
 - 4차 핵실험과 6차 미사일 발사는 비핵화 국면의 장기화를 의미하므로, 협상 국면의 강화와 관계없이 대북 핵 억제/방어/보복 수단의 안정적 보장계획 역시 발전

3. 북한의 반응

가. 인식과 반응

- 핵실험은 자위적 조치라는 입장 표명
 - 북한 당국은 4차 핵실험은 자위적 조치이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 표명(1.6.)

- 4차 핵실험은 미제와 제국주의자들의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1.10.)
- 4차 핵실험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며,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정정당당한 것이라고 강조(1.10.)

○ 핵보유 전제로 대화 제의

- 북한은 핵무기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핵기술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1.15.)
- 한미합동 군사훈련과 북한 핵실험의 동시중단, 평화협정 제안은 유효하다고 강조(1.15.)

○ 대북제재 강력 반발

-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생똥맞은 도발’이라고 비난했고, 북한군은 대남방송을 재개했으며, 1.13. 이후 약 100만 장의 대남전단 살포
-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개성공업지구를 전면중단시킨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뼈아픈것인가를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것이다”는 입장 표명(2.11.)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그 추종 세력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노골적으로 짓밟는 길에 들어선 이상 우리의 단호한 대응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3.4.)

○ 군사도발 위협

- 북한은 자신들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위협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세력에게 정의의 핵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1.19.)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중대 성명을 통해 1차 타격대상으로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을, 2차 타격대상으로 ‘아태지역 미제침략군의 대조선침략기지와 미국 본토’를 지목하면서 도발 위협(2.23.)
- 북한은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등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전쟁 도발 광기에 전면대응하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3.7.)

나. 분석 및 평가

○ 핵개발의 정당성 강변

- 북한은 핵개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미국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핵무기의 사용대상은 미국이고 핵무기가 미국을 겨냥하고 있고, 정의의 핵공격을 통해 미국 전역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고 위협
-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 정당한 자위적 조치고,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며,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다고 주장
- 북한은 핵개발의 원인과 책임을 미국에게 돌리기 위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 자위적 조치로 핵을 개발했다는 입장을 표명

- 핵보유국으로 목인받기 위해서 핵능력 과시
 - 핵탄두 소형화·표준화·규격화를 실현했고, 지상·해상·공중에서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운반 수단들을 보유했다고 주장
 -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핵기술의 이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 레드라인 제시
 -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과시하면서 핵보유를 목인받기 위한 전략 실행

- 4차 핵실험을 김정은 권력 강화에 활용
 - 노동신문에 수소탄 성공과 김정은 우상화 시 6편 게재
 - 핵실험 최종 명령서에 서명하는 김정은과 1953년 정전협정 문건을 비준하는 김일성 사진을 게재해서 김정은의 권위를 구축하는데 김일성의 권위를 이용
 - 핵개발을 김정은의 업적으로 내세우면서 권력 강화에 활용하려는 의도

다. 향후 전망

- 핵개발 지속
 - 핵무기 고도화 프로세스(소형화·경량화·다중화·정밀화)를 추진하면서 수소폭탄 개발을 지속
 - 핵무기 운반수단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개발을 지속
 -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핵보유국으로 목인받기 위해 노력

○ 대남 위협과 협박 지속

-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응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 점검활동을 비난하면서 제2의 6·25전쟁 참화를 몰아오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위협
- 북한은 군부의 성명 형식으로 우리 정부와 미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거론하고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대남 협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에 반발해서 대통령 실명 거론 비난 등 대남 비난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군사도발 가능성 상존

- 대북 확성기 타격 등 전선지역에서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NLL 주변이나 전선지역에서 국지도발을 실행할 가능성도 존재
- 고위층 탈북자에 대한 암살·테러를 실행하거나 공공기관·금융기관 전산망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감행할 가능성 존재

○ 국면 전환을 위한 대화 제안 가능성

- 북한은 도발 이후 점증하는 외부 압박을 감소시키고 외교적 운신 공간을 열어,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 국면 전환용 대화를 제의하는 패턴을 반복
- 이러한 패턴이 4차 핵실험 이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바, 북한은 4차 핵실험 이전부터 합동군사훈련과 북한 핵실험 동시중단, 북한식 평화협정을 미국에 제안한바 있음.
- 북한은 올 하반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국면전환용 대화공세를 펼칠 가능성 농후

Ⅲ. 각국의 정책적 대응

1. 한국의 대응

가. 인식과 반응

-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기존 방식과 다른 강경 대응 천명
 -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위협과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규정
 - 박근혜 대통령, 국회 연설(2.16.) 통해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고 지적
- ‘강력하고 실효적 제재’ 위한 양자·다자 차원 노력에 집중
 - 유엔 안보리 결의 중 가장 강력한 제재를 끌어내기 위한 주변국 외교에 역량 집중, 북한인권 외교 등을 통해 북한 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의식 제고
 - 북한 기항 선박 국내 입항 금지, 북한산 물품 제3국 우회 수입 금지, 금융 제재 대상 확대(총 개인 40명, 단체 30개) 등 독자적 제재 조치 시행
- 한미 양국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DD) 배치 가능성 논의 착수로 북핵 대응 강화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사드 협의 시작 선언(2.7.)했으나

한미공동 실무단 약정 체결(3.4.)은 한 달 가까이 지연

-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와 한미동맹 차원의 사드 배치는 별개 사안
입장 유지(국방부 대변인 발표)
- '사드 배치시 한중관계 파괴'(추귀홍 중국 대사 발언) 등 중국의
반발에 대해 정부는 '자주권 차원의 결정' 강조

○ 2016년 사상 최대 규모 한미연합 군사훈련 시행

- 키 리졸브 연습(3.7.~3.18.)과 독수리 훈련(3.7.~4.30.)에 한국군
30만명, 미군 만 7000명 등 역대 최대 규모 병력 참가
- 북한군 대량살상무기(WMD) 사용 징후 포착시 선제 타격 및 4D
작전 구사 포함 작계 5015 적용

○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및 대북 인도적 지원 잠정 중단 조치 시행

- 국민 신변안전 확보 최우선 강조하며 설 연휴 기간 중 전격적 가
동중단 선언
- 홍용표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 유입 자금 70%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 통해 핵, 미사일 개발 전용 확인
-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강경 대응 통해 유엔 등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끌어낼 수 있음을 강조

○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전단 살포 검토 등 강력한 심리전 시행

- 국가안전보장회의, 4차 핵실험 직후 8·25남북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북 확성기 재개방침 발표
- 북한의 대남 전단이 남한 주요 지역에서 발견됨에 따라 대응수단

으로 2004년 중단됐던 대북 전단 살포 재개 검토
(한국군은 최대 30km 사거리 155mm 견인포용 전단탄 보유)

나. 분석 및 평가

- 한·미·일 독자 제재 및 유엔 제재 이행 국면 지속으로 인해 '8·25합의' 후속조치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노력 전면 중단
 - 한미 간 공유하고 있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의 틀 내에서 실효적 대북 압박 수단 구상 및 논의에 대북정책 수단 집중
 - 남북관계의 규범적 프레임은 대북 및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대남 비난 전단 대량 살포 등으로 인해 냉전 시기로 회귀
 - 종교 및 사회문화 교류,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사업, 나진-하산 프로젝트 시범사업 등 비정치적 차원 남북관계 재개 가능성 희박
- 남북관계의 전반적 개선을 위한 핵심 요인인 대북 신뢰도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
 - 2016년 신년사에 표현된 김정은 제1비서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 역시 지난해에 비해 하락한 수준으로 평가
 - 4차 핵실험 이후 남북한 모두 상대방의 대외정책에서 남북관계가 갖는 상대적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는 양상

다. 향후 전망

- 한국 정부의 '실효적 제재' 및 '강력하고 포괄적 제재' 추진으로 인해 남북관계 동력 상실
 - 정부의 '전방위적 총력대응'(외교안보부처 청와대 업무보고) 천명,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핵개발, 체제 붕괴 재촉’ 언급 등으로 인해 압박 위주의 대북정책 지속 가능성

- 기존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 비핵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으로 요약
- 그러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제재 국면 지속에 따른 북한의 입장 변화(추가 핵실험 중단, 6자회담 복귀 등) 없이 남북관계의 의미 있는 진전은 불가능

○ 남북 간 직접대화 복원 가능성은 희박하나 북한의 태도 변화가 감지될 경우 주변국 요인에 따라 대화 중재 시도 가능성

- 4월 말까지 계속되는 한미합동 군사연습과 사드 배치 실무 협의, 한국의 독자 제재 시행 등 국면에서 남북 간 대화 복원 가능성 희박
- 한미합동 군사연습 기간 중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고 군사적 대응조치를 통해 한반도 주변 긴장이 최고조에 이를 경우 미국 또는 중국의 막후 개입 개연성은 존재
- 중국은 ‘비핵화-평화협정 동시 논의’ 및 안정 유지 필요성과 유관국간 대화 필요성 지속 강조(3.8., 왕이 외교부장 전인대 기자회견)

2. 국제사회의 대응

가. 미국의 대응

(1) 인식과 반응

- 미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
 - 백악관 대변인과 케리(John Kerry) 국무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1.6.)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6자회담 당사국 및 유엔 안보리와의 협력을 통해 대응할 것임을 밝힘.
 - 핵 보유를 통해 체제유지를 도모하는 북한의 전략이 실현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핵 포기가 북한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방법이 될 것임을 밝힘.
 -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2.7.)에 대해서도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이자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하면서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할 것임을 천명
-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동맹국 안전을 지킨다는 공약 재확인하고, 군사력 전개 및 동맹국 협력 강화 등 지역안보 위한 조치 적극 추진
 - 핵무장 전략폭격기 B-52(1.10.) 및 F-22 스텔스 전투기(2.17.)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시키고, 핵우산 및 확장억제 제공을 재확인 했으며, 3월에 사상 최대 규모 한미연합훈련(키 리졸브) 실시
 - 블링큰(Tony Blinken) 국무부 부장관은 한·미·일 외교차관회의(1.16.)를 통해 삼각안보협력 및 대북정책 공조 강화 강조
 - 미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미사일방어태세 개선을 위한 조속한 협

의 필요성을 표명했으며, 한미 군 당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이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함(3.4.).

○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다자적 제재 강화와 국내법에 의한 독자적 제재 강화 추진

-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고 협의 및 채택 과정을 주도했으며(채택일: 3.2.),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의결한 대북제재강화법안에 서명함(2.19.).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행 및 북한발 모든 선박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고 광물 수출을 금지하는(민생목적 제외) 등 한층 강화된 제재 조치 다수 포함

- 미 의회가 제정한 대북제재강화법안은 행정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재량권 부여 및 180일 이내 자금세탁 우려대상국 지정 여부 검토 등 포함

○ 미국은 대중국 압박 및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대북 제재 강화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 유도

- 미국은 대북 제재의 성공을 위해 중국의 적극적 동참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가짐.

- 케리 미 국무장관은 중국 방문 시(1.26.)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대북 제재 강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함.

- 케리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2.24.) 유엔 안보리 제재 강화안에 대한 기본적 합의를 이루었고, 제재 강화와 더불어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6자회담에 북한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

다는 점에 공감함.

(2) 분석 및 평가

- 미국의 대북정책의 초점은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맞추어짐.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는 미국 조야에서 북핵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확산되는 계기가 됨.
 - 전략적 인내로 대표되는 기존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은 (예, 1.13. 북핵 문제 관련 미 의회 청문회) 북한의 핵개발 의지와 능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다자적, 독자적 대북제재 추진으로 이어짐.
 - 미국은 향후 가능한 협상의 문을 열어놓지만, 현재 정책의 초점은 강력한 제재의 이행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변화시키는데 맞추어져 있음.
 - 성김(Sung Kim)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대북 협상에 우선한다는 미국의 원칙적 입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밝힘(3.9.).
- 미국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수립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낙관하기 어려운 한계 존재
 - 미국 주도로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및 미국 의회가 제정한 대북제재법안은 모두 이전과 비교할 때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방안으로 평가될 수 있음.

-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들을 다수 포함하지만, 원유 공급 차단 실패 및 세컨더리 보이콧 부재 등의 약점을 가진.
 -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 낙관하기는 어려움.
 - 미 의회의 제재법안은 자금세탁 우려국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한 기간을 180일 두고 있으며, 세컨더리 보이콧 재량권을 행정부에 이양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가질 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아직 어려움.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및 동북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재균형(rebalancing)의 기회로 작용
-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한중협력 보다 한미동맹 및 한·미·일 삼각안보협력 강화를 촉진하면서 미국의 재균형 전략에 기여함.
 - 북핵 위협은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명분을 강화하였고, 한미 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 협의가 공식화된 이유가 되었음.
 - 북한의 도발로 촉진된 미국의 동북아 재균형과 그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지역적 대립 및 갈등의 심화를 유발함(예, 사드 배치 논란, 대북제재 수준 관련 입장 차이).

(3) 향후 전망

- 미국은 강화된 안보리 제재의 실행을 주도하는 가운데 국내법에 의

- 한 제재 이행 카드 사용을 검토하면서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
-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한 대북제재조치를 회원국들이 적극 이행하도록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행정부에 이양된 국내법에 의한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 여부 및 자금세탁 우려국가 지정 여부 검토를(향후 약 5개월 이내) 추가적인 대북 지렛대로 삼으면서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국내법에 의한 대북제재 이행을 하는 경우 중국 기업이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중국의 반발 가능성이 있는바, 이것이 실행 여부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
- 미국은 북한에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서 협상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단기적으로 공식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비핵화를 우선시하는 미국과 평화협정 논의를 우선시하는 북한 사이에 공식적 협상이 시작될 수 있는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존재함.
 -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4월 말까지 있으며, 북한의 7차 당 대회가 5월 초에 개최 예정이라는 점은 적어도 상반기 중으로는 협상국면이 열릴 가능성은 매우 적고, 제재강화국면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함.
 -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북핵 문제 처리에 대한 본격적 조치가 다음 행정부의 과제가 넘겨질 가능성도 존재함.
 - 결과적으로, 2016년은 북미 간 입장차이로 인해 공식적 협상 없이 또는 비핵화 관련 큰 성과는 도출되지 않은 채 마무리될 가능성도 다분히 존재함.

- 동북아 안보에서 미국의 주도권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미국은 중국 견제 및 핵 비확산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함께 추진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재균형 전략의 중요 방편으로서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는 향후 미국의 동북아 안보 주도권을 뒷받침하는 효과를 가짐.
 - 한미 간 사드 배치 가능성 공식 협의는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임.
 - 미국은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목표뿐 아니라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핵 비확산의 전략적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정책적 선택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됨.

나. 중국의 대응

(1) 인식과 반응

-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로켓 발사에 대해 매우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공식 규탄성명 발표, 주중 북한 대사 초치 등 강경 대응 시사
 - 중국 외교부 성명(1.6.)은 과거에 비해 중국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 강조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결연히 수행” 한다는 문구 신설)
 -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서도 왕이 외교부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북한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언급(2.5., 중국 봉황TV 인터뷰)
 - 중국 외교부는 사태 직후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 초치(1.6., 2.7.)

- 중국 내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로켓 발사를 계기로 반복·협북 정서가 확산되었으며, 핵오염 및 백두산 화산 폭발 등 이슈에 대한 우려가 증대
 - 중국인 다수가 중국의 대북제재 지지 경향(환구시보 및 웨이보 여론조사 결과, 중국인의 60% 이상이 북한을 나쁜 이웃으로 인식)
 - 중국 동북 3성 지역의 환경 이슈 부각 및 중국 정부의 방사능 오염 측정 조치

- 그러나 중국은 국제사회의 중국 책임론 제기에 대한 반감과 미국의 고강도 대북제재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의 핵심이 아니다”(1.8.), “중국 책임론과 관련된 발언은 도리에 어긋난 것”(1.26.)이라고 강조
 - 중국 언론은 “중국 책임론은 억지”, “핵문제의 본질은 북미대결” 등의 기사를 통해 북핵문제의 미국 책임론 강조
 -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고강도 제재 요구에 “제재가 목적이 되면 안된다”고 응대(1.27.)
 - 중국 언론 역시 “북한 경제 전체를 붕괴시키려는 목표는 반대”, “제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 타격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입장 강조

- 북한 로켓 발사(2.7.) 이후 한미 간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의가 본격화되자, 북핵 논의보다 미국 주도의 동북아 안보 프레임 강화 추세에 대한 경계 주로 표출

-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평화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즉각 비판(외교부 대변인, 신화통신 등)했지만,
 - 왕이 외교부장을 비롯한 외교관료 및 언론은 주변국들의 '냉정 절제' 및 '한반도 평화안정'을 여러 차례 강조
 - 동시에 한국의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서도 관영언론을 통한 경고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북핵 국면이 사드 국면으로 전환
- 중국의 관련 행보는 한미의 사드 배치 관련 논의가 구체화됨에 따라 우려 표명의 수준이 점차 강화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2.7.), “엄중한 우려”(2.15.), “결연히 반대”(2.17.) 등으로 강도 제고
 - 중국 외교부는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사실상 초치하여 “중국의 엄정(嚴正)한 입장” 표명(2.7.)
 - 왕이 외교부장,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를 “중국을 겨냥한 칼춤”이라고 비판(2.12., 독일 로이터 인터뷰)
 - 주한 중국 대사가 직접 “사드문제로 한중관계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고 발언(2.23.) 등
- 북한 제재와 사드 배치 논란이 혼재되면서 대북 제재안과 관련한 미중 간 협의 과정이 지연되었으나, 미중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전격적 합의 도출
- 양국 외교장관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논의에서 중대한 진전” 있다고 발표(2.23.)

- 중국은 제재대상의 내용과 협의과정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
 - 그러나 북한 경제를 훼손하여 정권 붕괴를 의도하는 제재는 반대한다는 마지노선 제시
- 중국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합의(3.2.)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면서도 동시에 결의안의 방향성에 대한 선을 명확히 강조
- 외교부 대변인 및 주요 언론은 이번 결의안을 중국이 “성실하게 집행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민생과 인도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언급(3.3.)
 - 동시에 왕이 외교부장이 제기한 '비핵화-평화협정 체결' 병행 추진의 필요성 제기
 - 또한 새로운 결의안이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반응이지 포위와 봉쇄가 아니며, 결국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유일한 길임을 강조(3.2., 신화통신)

(2) 분석 및 평가

-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로켓 발사 이행으로 중국의 북한 불확실성 관리는 사실상 실패로 귀결된바, 이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중국의 강경한 대북제재 조치 필요성 제기
- 2015년 하반기 류원산 상무위원의 방북 등 일련의 북핵 관리(예방) 정책 실패로 인해 중국의 대북 영향력 한계 재증명
 -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방북(2.2.)에도 불구하고 로켓 발사 저지 실패

- 이에 따라 중국 내 정책그룹에서 북한 자산론보다는 북한 부담론이 부각되었으며, 북한의 불확실성 관리 차원에서 중국의 대북접근은 제재 강화 방향으로 결정된 것으로 판단
 -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통해 대중 자율성 제고 및 중국에게 대미 안보 부담 가중
 - 중국 정부 역시 북한의 비핵화 필요성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참여 입장 견지

- 그러나 중국의 북핵 해결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미국 책임론이 대세인바, 중국의 주도적 대북제재 필요성까지는 비공감
 - 중국 여론(대중)은 북핵문제의 본질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에 기인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우호적
 - 국제사회와 공조할 것이지만, 중국 책임론에 대해서는 과도하다고 인식

-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고강도 제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동시에 동북아에서 미국 주도의 안보 프레임 강화를 경계하는 경향 농후
 - 북한 불확실성 관리의 필요성은 동감하지만, 북한체제의 불안정(붕괴)까지 야기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민생 강조의 배경)
 - '주변국의 냉정과 절제', '한반도 평화안정', '대화협상'의 원칙 강조가 이를 방증
 - 전문가그룹에서는 이번 북한 위기를 계기로 미국의 동맹 강화 전략이 확대되는 것을 특히 경계(사드 배치 논의 및 미국의 MD체계 강화에 대한 우려)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합의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미중 간 전략 갈등이 협의과정에 배태되었기 때문이며, 최종 결의안 역시 미중 상호간 타협의 산물
 - 미국은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조치 및 세컨더리 보이콧 등 제재를 일반 무역 분야까지 확대 희망
 - 중국은 북한의 민생보호 및 한반도 혼란 방지 차원에서 미국의 주장에 반대하면서 절충 시도
 - 특히 사드, 남중국해 등 미중 갈등 현안들이 연계되면서 상호 이익 조율로 인한 시간 지연

(3) 향후 전망

- 중국의 대북제재 관련 행보 등을 종합해 볼 때,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안 이행에 일정 정도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중국적 질서 및 규범에 대한 의구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현 국제사회의 규범 준수에 대한 필요
 - 중국의 북한 관리 실패에 대한 반성 및 대북 영향력 제고 차원
 - 중국의 대북 피로감 및 국내정치적 요구에 대한 일정 정도의 해소
- 중국은 3차 핵실험 이후 국면과 같이 유엔 대북 제재안을 토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 및 해당 부처에 실행지침 하달 전망
 - 내부 절차상 실제 제재안의 본격 이행까지는 일정 정도의 시간 소요가 예상되지만,
 - 과거보다는 더 진전한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강력한 대북 제재안의 이행으로 북한에 대한 일시적 압박 효과 기대
 - 모든 북한화물 검색 조치만으로 북중 밀무역에 대한 상당한 파급 효과 전망
 - 석탄, 철광석 등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 역시 북한의 대중수출 비중을 감안할 때 북한 경제에 타격
 - 단, 북중무역의 현금거래 구조화, 북한 광물자원의 사업성 감소 등의 원인으로 제재의 효용성에 대한 근본적 한계 불가피

- 그러나 중국은 대북 제재안 이행의 수준을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혹은 민생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조율할 개연성 다대
 -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한반도 불안정 고조(전쟁 연루), 대량 난민 사태, 핵 및 대량살상 무기 확산
 - 중국의 의지에 따라 제재의 구멍이 발생할 개연성('생계'를 둘러싼 해석 논란, 지방정부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

- 결국 중국의 향후 대북정책은 국제사회와 어느 정도 공조가 가능하나, 고강도 강압전략의 지속성에 있어서는 한계 불가피
 - 북중 접경무역에 대한 일시적 통제 혹은 관리 강화는 가능
 - 중국 동북 3성의 경제상황(노동인구 부족) 및 북한의 불안정성 요소까지 고려한다면, 지속적인 봉쇄 정책은 난망
 -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주변국에게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환경 조성 과 출구전략(유화책 포함)의 필요성 강조 가능

- 중국은 주변국의 냉정 절제 및 한반도 3원칙, 즉 비핵화, 한반도

평화안정, 대화 해결, 그리고 6자회담의 방법론을 계속 견지할 것으로 전망

- 대북제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 홍보
- 제재를 통한 북한의 불확실성 관리와 동시에 미국의 대중 견제 강화 경계(관련국의 냉정, 한반도 평화안정 강조)
- 왕이 외교부장의 제안처럼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 추진’ 등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대화국면 전환 지속 시도

다. 일본의 대응

(1) 인식과 반응

- 일본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북한 핵실험이 일본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적극 대응할 것을 표명
 - 아베 총리는 1.6. “일본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중략) 강하게 비난한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중략) 단호한 대응을 취해 간다”라고 말하며 북핵 위협이 일본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임을 재강조함.
 - 같은 날 기시다 외상은 한미와 연계해서 관련 정보 수집에 집중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주변국과 연대를 통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함.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신속한 대응
 - 일본 정부는 2.7.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NSC를 열고 정보수집 및 대응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고, 아베 총리는 “미사일 발사 강행

을 결코 용인할 수 없고, (일본은) 국제사회와 연계해서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표명함.

- 일본 정부는 발사 직후 유엔 안보리에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고,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한 일본의 독자적 제재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시함.

○ 일본 정부는 북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주변국과 협력적 대응을 모색

-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1.6. 직후, 아베 총리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로 협의하였음.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인 2.9. 오바마,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갖고 대북 제재를 위한 연대를 확인함.

- 1.6.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통해 북핵실험이 과거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인정하고, 과거 결의에서 표명한 ‘북한이 핵실험을 반복하면 증대한 조치를 취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새로운 대북제재 조치를 취할 작업을 시작하였음. 또한 올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된 일본도 미국과 협력해서 유엔 제재 강화를 목표로 하였음.

○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와 별도로 일본 정부는 독자적 대북제재를 추진

- 아베 총리는 2.8. “납치, 핵, 미사일과 같은 여러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독자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했다”라고 표명함.
- 일본 정부는 2.10. 독자 제재조치를 결정(19일 각의 결정). 주요 사항은 대북 송금의 원칙적 금지, 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

지, 인적 왕래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됨.

-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제재로 생각되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으며, 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발표 이후 진행되는 유엔 안보리의 논의를 가속시키려는 목적도 있었음.

○ 북한의 납치 조사 중지 발표와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

- 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 이후 북한은 2.12.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했다고 선언함.
-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납치 재조사 합의(스톡홀름 합의)를 포기할 생각은 없으며 지속적인 대화 재개를 추진할 것을 표명함.

○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대한 한일 간 협력 및 일본의 반응

- 2.1. 한일 외무장관은 전화회담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해 협력하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긴밀한 정보교환을 확인했음.
- 3.2.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일본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모든 국가들이 결의에 포함된 제재조치를 완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향후 가맹국의 결의 사항 이행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2) 분석 및 평가

- 국내 정치적으로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문제는 아베 정권에게 호재로 작용

- 안보법제 시행(3월), 참의원 선거(7월)를 앞두고 야당의 공세를 차단할 수 있고, 아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사대국화 전략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일본 우익의 비판 여론을 약화하는 효과와 함께 일본이 주장하는 한국의 '중국경사론'을 더욱 비판하면서 한국과 중국을 떼어놓으려고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음.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일본 위기 관리 시스템의 작동
- 일본 정부는 미사일 방위 시스템을 배치하고, 발사 직후에는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였음.
 - 일본 정부 및 자민당은 2015년에 성립된 안보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일본 정부가 북한 요인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함.
- 일본의 대북정책은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북일대화 계속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
- 아베 정권은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실험과 관련해서 독자적 대북제재 실시 및 자위대에 '북한 미사일 파괴조치' 요격 명령 하달 등의 단호한 대응을 표명함.
 - 아베 정권은 출범부터 '납치 문제'를 가장 중요한 외교적 과제로 내세우면서 결국 2014년에 스톡홀름 합의의 성과를 가져왔고, 납치피해자 가족의 요구 및 이를 지지하는 국내 여론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북대화를 유지하고자 함.

-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한·미·일 연대 강화
 - 2.10. 한국이 제재를 발표한 1시간 후에 일본도 독자 제재를 발표함. 스가 관방장관은 “한일이 긴밀히 연대하고 있음은 확실하다”라고 발언하였음.
 - 아베 정권은 미국, 한국과 연대해서 북한에 강한 자세를 나타내고 중국에 압력을 가하려는 목적이 있었음. 이를 통해 안보리 결의의 조기 채택을 기대하였음.
 - 결국 일본은 독자 제재조치를 통한 ‘실효성’보다는 한국, 미국과 연대해서 의연한 ‘태도(자세)’를 표시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음.

- 한국 내 일부 핵무장 발언에 일본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핵무장론에 대한 논의가 일본 내 일부 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제기
 - 한국 내에서 주장하는 한국의 핵무장 논의에 대한 사항이 일본 매스컴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지고 있음. 일부 일본 우익 세력이 주장하는 일본의 핵무기 개발 주장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대다수 일본 국민들의 핵알레르기 및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를 생각할 때 일본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은 매우 낮음. 또한 미일동맹 강화 추구를 통해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아베 총리 입장에서 독자적 핵무장의 길을 걸을 가능성은 희박함.

- (3) 향후 전망
 - 단기적으로, 연말연초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한일 공조 체제가 강화되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미일 전화협약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한 것에 대해 미국의 협력에 감사하다는 뜻을 나타냈고, 오바마는 이러한 결단으로 한·미·일 협력이 평화와 안정에 크게 공헌하고, 유엔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평가함.
 - 향후 북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체제가 강화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로 인한 한일협력 분위기와 함께 한·미·일 3국 안보협력 논의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일본 방위정책에서 북한 위협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일본 방위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있음.
- 1990년대 북한 핵개발 의혹 및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 위협이 일본의 방위력 강화 이유가 되었다면, 2000년대 이후는 중국의 부상 이 일본에게 가장 중요한 안보 위협임.
 - 이번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기로 2016년 하반기에 발표되는 방위백서를 포함한 일본의 방위정책에 대한 서술에서 중국 위협뿐만 아니라 북한 위협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일본 정부는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실험을 일본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높음.
- 아베 총리가 유엔 제재와 관련해서 일본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은 2가지 측면에서 해석 가능. 첫째, 미국을 포함한 유엔 제재에 대한 협력. 둘째, 유엔 외교 강화를 위한 포석

- 아베 정권이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주장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추구하는 아베 정권의 외교 이니셔티브를 강화하는 목표에 부합함.
- 위와 같은 단기, 중기적 전망을 감안해서 한국 정부는 먼저 실질적인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과거 국민감정 때문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실패한 사례가 있음. 하지만 대북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한일 간 GSOMIA 체결은 필수적이며 한민구 국방장관도 2.7. 국회 답변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함.
 - 하지만 안보 문제에 대한 대일 국민 감정을 감안해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과 같은 별도의 안보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단계적, 순차적으로 시작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한 '갈등'과 '협력' 요인이 충돌하지 않는 전략적 외교의 추진이 필요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및 북한 핵실험을 통해 한일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여전히 독도 문제,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한일 간 충돌 가능성은 상존함.
 - 한일 간 '갈등'(영토, 역사 문제)과 '협력'(안보, 경제) 요인이 충돌하지 않도록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략적 외교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대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변국과의 균형 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

- 현재 아베 정권은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실험이 박근혜 정부의 대중국 접근 정책의 실패라고 규정하고, 한국의 ‘중국제사론’이라는 기존 일본 정부 주장의 정당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북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주변국 모두와 협력한다는 주변국과의 균형 외교를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홍보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라. 러시아의 대응

(1) 인식과 반응

- 북핵 4차 실험에 대한 러시아의 첫 공식반응은 1.6.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
 - 대변인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발표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기술적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북한의 핵 무기 개발을 향한 새로운 행보이며 이는 국제법과 현행 유엔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표명
 - 또 그는 북핵실험이 그렇지 않아도 군사적, 정치적 대결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의 상황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
 - 같은 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 이미 푸틴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으며 “푸틴 대통령은 강한 유감과 우려를 동시에 표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해 신중하고도 철저한 진위파악을 지시했다”고 발언
- 러시아의 기본 입장은 북핵 보유국 지위 불인정. 그러나 동북아 관련

국들의 군사적 자제 촉구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외교적 해결 강조

- 러시아 외무부의 이고르 모르굴로프 차관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 전화통화(1.6.)
- 푸틴 러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 전화 답화(1.13.)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전화통화(1.13.)
- 모르굴로프 차관과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 회담(1.19.)

○ 러시아 외무부, 북 제외한 5자회담 개최 반대

-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남북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하고 미국의 핵전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이 완전한 의미의 한반도 핵문제 해결”이라고 강조(1.26.)
- 또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북한을) 고립시키는 방법이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반대 의사 표명
-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6자 회담을 조기에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

○ 독자 제재와 북러 경협 중단에는 반대 입장 고수

- 갈루시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북한과의 무역량을 10억 달러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나진-하산 철도 프로젝트를 계속할 것이라고 발언(1.26.)
- 박명국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모스크바에서 북러 간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의 수용 및 송환에 관한 협정' 체결(2.2.)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최종 합의 지연과 예외조항 요구
 - 예외조항은 북한 나진항 통한 외국산 석탄 운송 허용, 민간 항공기의 북한 국외 급유 허가,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의 러시아 주재 대표에 대한 제재 제외 등 3개 조항
 - 러시아는 강력한 대북제재가 러시아에 미칠 편익 계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형국이나,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대한 국제적 제재 자체에는 공조 의지 표명

(2) 분석 및 평가

- 북핵 4차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러시아 정부와 사회의 반응은 대체로 냉담
 - 러시아의 외교 현안이 중동 정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
 - 러시아 언론의 주된 논조로 볼 때, 북한의 핵실험이 러시아 안보에 크게 위협이 된다는 인식은 소수
 - 북한의 수소탄 실험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견해가 대세
-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강화되고 아태 지역에서 MD(미사일방어체제) 설치가 가속화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
 - 미국이 동북아에서 지정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핵 위협을 이용한다는 것이 대다수 러시아 전문가들의 견해
 - 모르굴로프 외무차관의 발언(2015.10.)처럼, 러시아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결코 인정하지 않으나 북핵 문제가 생긴 근본 원인

도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 고수

- 대북제재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해결 모색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기존 주장 반복

○ 이번 북핵 사태로 인해 러시아 국가안보 정책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수정 및 저하될 것으로 보는 것은 속단

- 작년 말(2015.12.30.) 승인된 러시아의 <신국가안보전략> 문서에 북핵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보다는 아태 지역에서 MD 설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전 문서에서보다 더욱 강해진 점에 주목할 필요

-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이 자국의 안보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결정적인 위협으로는 보지 않으며, 그보다는 한국이 북핵실험을 빌미로 미국의 '전략 자산(THAAD 등)' 배치를 요구할 가능성을 더욱 큰 위협으로 인식

- 아울러 동 문서에 '색채혁명(Colour Revolution)'을 위협으로 평가하는 부분에도 주목할 필요. 즉, 서방(특히 미국)의 의도에 따라 반정부 시위가 정권 붕괴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러시아는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 이는 김정은 정권 붕괴 등 북한 급변사태 시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

○ 러시아는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해 북한과의 경제협력 관계 유지 및 북한산 자원 확보, 그리고 남·북·러 삼각 경협이 지속이 절실하나,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도 신경 써야 하는 난감한 상황

-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에 다소간의 불만이 있음에도 예외 조항을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한 것은 대미·대서방 유화

필요성도 고려했을 것으로 분석

- 러시아는 시리아 분쟁 관련 미국과의 협상 레버리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바, 한반도 문제도 중동 사태와 연계되어 있음을 주지할 필요

(3) 향후 전망

- 러시아는 대북제재 관련 국제사회와의 공조에서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며 북핵에 반대하면서도 대북 협력 유지라는 기존 노선을 견지할 전망
 - 러시아는 중동과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복잡다단한 분쟁 개입 국면에 처해있는바, 동북아와 한반도에 외교력을 집중시키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동북아의 현상유지를 최선으로 인식
 - 동북아 역내 한·미·일 동맹 강화 견제 위해 중국과 보조를 맞추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
 - 러시아 국정 과제인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대북 경험 유지 및 확대 노력 불변
- 러시아는 이번 북핵실험이 러시아가 주장해 온 동북아 및 한반도 긴장 완화 해법의 유효성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인식하는바, 6자 회담 조속 개최 및 정치적 해결을 위해 러시아가 중재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대외 이미지 구축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
 - 즉,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및 북미 간 교차 승인을 비롯한 정치적 해결이 즉각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북한의 입장에 공조
 - 러시아는 향후로도 미일과 한국에게 이 같은 해법의 수용을 강력

히 요구할 것으로 전망

-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남·북·러 삼각경협을 통해 한반도 안정화에 기여하고 러시아의 평화적 중재자 역할의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구한다는 방침
- 러시아가 대북제재에서 중국과는 다소 차별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당분간 북러 밀착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북러 모두 경제난에 직면해 있고 대북제재로 인해 양국 경협 기반이 손상될 것이 불가피한바, 북러 경협의 실질적 성과는 기대가 난망
 - 한국이 불참할 경우,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포함한 남·북·러 삼각경협은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예상되며 러시아는 한국을 대체할 협력 파트너를 모색 중이나 그 전망은 불투명
 - 북한의 체제 불안정이 북러 국경의 안보 환경을 심대하게 손상시킨다는 인식하에 재러 북한 노동자 관리 및 탈북자 송환 등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

마. 유엔의 대응

(1) 인식과 반응

- 4차 핵실험 직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이 매우 우려(deeply troubling)스러우며, 핵실험을 금지하는 국제규범과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위반이라고 규정했음(1.6.).
- 1.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주유엔 우루과이대표

부 엘비오 로셀리(Elbio Rosselli) 대사 역시 보도성명(SC/12191-DC/3600)을 통해 이번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안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 위반임을 밝혔음.

- 본 실험은 유엔헌장 7장에서 명시된 바와 같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정의내리며,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은 즉시 본 실험에 관한 새로운 결의안을 작성할 것이라 밝힘.
- 또한 이는 결의안 2094호의 제36항, 즉 북한이 추가도발할 경우 자동적으로 중대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재안을 결의한다는 점에 의거하기도 함.

○ 이에 3.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S/RES/2271(2016)).

- 사만사 파워 미국 유엔대사가 금번 안보리 결의에 대해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라고 평가할 정도로,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관련 행위가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명백한 위협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다양하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제시함.

(2) 분석 및 평가

- 유엔의 대북제재는 별도로 대북 양자제재를 하지 않는 국가들까지 제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또한 제재의 국제적 순위, 기준과 근거를 제시해주는 역할을 함.
- 이제까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유엔의 제재는 누적적으로 강화되어왔음. 유엔의 대북제재는 공통적으로 (1)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핵비확산의 국제규범에 대한 북한의 준수를 촉구하고, (2)북한과 유엔 회원국의 금수의무를 강조하고, (3)그리고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국제사회에 보여준 도발을 위협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징벌 차원의 제재조치를 포함함.

- 대북 유엔제재의 특징은 제재가 추가됨에 따라 제재 대상이 확대되고, 북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됨과 동시에 전략물자수출통제와 관련해 캐치올(catch-all) 성격이 짙어졌다는 것임.
- 가장 최근의 결의안인 2094호의 경우 개인과 단체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하고 항공, 선박에 대한 제재, 그리고 북한 외교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감시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었음.

○ 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70호의 경우 북한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국가재정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갖는 우려를 전달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영역에까지 제재 범위를 확대시켰고, 이를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이 전달되는 네트워크를 차단하고자 했음.

- 본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가 기존 안보리 결의안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동시에 이것이 아시아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어온다는 점을 명시함.
- 2006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한 탄도미사일 기술에 대해 북한과 협력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또한 핵무기 관련, 탄도미사일 관련, 그리고 그 외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제품, 기

계, 기술 등의 북한 이전을 금지한다는 점도 강조함으로써 캐치올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음.

- 결의안 2270호는 북한 외교관이나 정부대상이 제재대상인명 혹은 제재대상(entity)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 기존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할 경우 해당 외교관이 활동하는 회원국은 그를 추방할 것을 결정함. 이는 외교면책특권을 명분으로 제재를 회피하려는 가능성을 막으려는 조치임. 또한 자국인이 아닐지라도 제3국인이 제재대상과 제재대상인명을 위해 일하며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를 본국으로 추방할 것을 결정함. 이는 일종의 세컨더리 보이콧으로서 본 결의안에 최초로 명시됨.
- 또한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내에서 핵무기개발과 관련된 물리학, 컴퓨터과학, 핵공학, 우주공학 등의 학문을 북한인들에게 강의하거나 훈련시키는 것을 금지함.
- 본 결의안은 또한 모든 회원국들이 자국의 영토, 즉 항구, 공항,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수송되는 북한행/북한발 북한 화물들을 전수조사할 것을 결정하였고, 또한 회원국들로 하여금 기존 결의안에 금지된 화물을 신고 있는 배의 입항을 금지토록 결정함. 또한 북한 해운업체인 원양해운관리회사(OMM, Ocean Maritime Management) 소속 선박들은 자산동결대상임을 밝힘.
- 또한 북한의 석탄, 철광석 등은 민생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 공급 및 이전할 수 없도록 금지되었으며, 북한의 금과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등은 수출이 전면 금지되었음. 이는 이들의 수출을 통해 얻은 재정수입이 탄도미사일 혹은 핵개발에 전용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힘.

- 다만 대북원유공급은 금지되지 않았으나, 로켓 연료 혹은 항공유의 대북판매 및 공급은 금지되었음. 그러나 인도적 목적의 경우 혹은 북한행 북한민항기의 경우 필요에 따라 재공급을 받는 것은 허용되었는데, 이는 러시아의 요청으로 수정된 사항임.
- 또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북한 정부 및 노동당 소속단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자산 및 재원의 이전을 금지했는데,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제재대상으로 거명된 것은 처음임.
- 북한은 유엔 회원국에 은행지점 혹은 사무소를 신설할 수 없으며, 기존에 있던 지점도 90일 안에 폐쇄하고 거래활동을 종료해야 함. 또한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활동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북한 내 새로운 지점, 사무소, 계좌 개설이 금지되며, 90일 안에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기존 사무소 및 계좌를 닫아야 함. 본 조항은 북한과 유엔 회원국 간의 금융거래를 양방향에서 종료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강도 높은 제재조치로 인식되고 있음.
-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제시한 보호조치를 적용할 것을 요청하였음.
- 모든 유엔 회원국은 결의안 채택 90일 안에 결의안에 명시된 제재조치 이행상황을 안보리에 제출해야 함. 제재위원회는 정시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국이 성실하게 보고서 작성에 임하도록 지원해야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아웃리치를 시도해야 함.

○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도출되는 대북제재 결의안의 경

우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음.

- 기본적으로 유엔 회원국들의 일관적인 준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이 동북아 안보를 저해하거나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강도의 제재조치에 반대해왔기 때문임.
-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전문가그룹(panel of experts) 보고서들에 따르면 유엔의 제재조치는 비록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혹은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 개발의 속도를 지연시키는 데는 기여했다고 분석하고 있음. 즉, 제재의 경제적 효과는 분명히 존재했으나 그것이 제재의 정치적 목적인 비핵화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임.
- 요컨대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조치들은 1718위원회로 불리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설립과 전문가그룹 운용을 통해 제재수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으나 이것에 대한 회원국들의 실질적인 협조가 미약했기에 그 효과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 존재함.

(3) 향후 전망

- 이번 4차 북핵실험으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는 그 도출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일본, 한국 간 의견 불일치가 재확인되었음.
- 중국의 관점에서, 북핵실험의 본질적인 원인은 미북갈등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또한 원유공급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현재 준비 중인 포괄적인 제재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인도적 결의안이며, 이로 인해 북중 접경지역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국은 우려하고 있음.

- 요컨대 한국과 미국은 유엔의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하여 유엔 국가들이 본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임.

- 유엔을 제외하고, 2016년 상반기 동안 북핵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사회차원의 대북압박을 견인할 수 있는 다자협의체로는 오는 3월 열릴 핵안보정상회의와 MIKTA(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 외교장관회의, 5월 아셈 고위관리회의 등이 있음. 이를 통해 기능적, 지역적, 중견국 외교차원의 다차원적인 북핵 외교공조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임.

IV. 향후 정세 분석 및 전망

1. 북한 내부 차원

가. 정세 총괄

-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는 김정은이 당분간 핵무기에 기초한 대내 장기 통치체제 공고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 지도자 연령은 통치 구상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 김정은은 최소 30년 이상의 집권을 염두에 둔 통치 구상 아래 전략 수립에 몰두
 - 권력 공고화와 내부 결속 통한 안정적인 통치기반 마련에서 핵무기 고도화는 최우선 사안이며 장기 통치의 핵심적 기반 역할
- 핵무기 고도화(소형화·경량화·다종화·정밀화)를 최대한 단기간 효율적으로 과시하여 ‘핵보유국’으로서의 기술적 능력 인정에 일차적 목표
 - “메가톤급의 속력으로 세계의 눈”(1.19., 노동신문)을 끄는 것을 목표로 핵능력을 최대한 신속하게 외부에 보이는 프로세스에 집중
 - 기술적 사거리 확보 차원에서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능력을 과시적으로 대외에 지속 공개하면서 미국 본토 위협 능력을 보유한 것처럼 압박 지속
- 한미연합훈련 및 사드 배치에 맞대응하여 단거리 미사일 및 방사포 발사 등을 통한 대내외 긴장 고조
 - 2016년 상반기 대북제재, 한미훈련, ‘70일전투’ 등 내외부 긴장

이 최고조에 달하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군사 시위 가능성

- 당 대회 이후 내부적으로 체감하는 대북제재의 효과 정도에 따라 출구전략 차원에서 사드 배치 비난과 연계한 ‘평화’ 공세에 집중할 가능성

○ 기본적으로 2017년 상반기까지는 대외·대남관계 개선 행보보다는 핵무기 고도화의 가시적 성과와 통치기반 안정에 집중하는 행보 가능성

- 선부른 대외·대남관계 개선 행보보다는 미국 대선 및 한국 대선 등 향후 주변국 일정을 겨냥하여 시위성 도발이나 강경 언술 예상
- 대외적 고립·비난을 감내하고 당분간 철저하게 핵무기 고도화의 가시적 성과와 대내결속에 집중하는 통치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

나. 이슈별 분석

(1) 2017년 상반기 대북제재에 대응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움직임과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한 비난 공세 강화

○ 2월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한 ‘정밀화’ 단계의 핵능력 과시 이후 하반기 미사일 전력화를 과시하는 내부 훈련에 중점

- 3차 핵실험은 소형화·경량화, 4차는 다종화, 장거리 로켓 발사는 미사일과 핵탄두 결합을 통한 전략무기화에 해당하는 ‘정밀화’ 단계
- 사이클을 완주한 만큼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등 직접적 도발은 하반기 자제하고 미사일 전력화를 보여주는 군사훈련 중심 행보 예상

- 사드 배치를 비난하는 공세적 언술 구사, 전술적으로 무력화하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 및 휴전선 부근 기동훈련 시위 가능성
 - 사드 배치를 정전협정 및 대북제재 대응 쟁점으로 부각시키면서 이를 전술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거리 미사일 및 방사포 발사 훈련 가능성
 - 5월 당 대회 통해 극적으로 핵무장에 기초한 당 노선 선언, 10월 당 창건일과 11월 미국 대선 사이 미사일 전력화 과시 훈련 집중

- (2) 당 대회 통해 ‘병진노선’ 구현으로 핵강국·문명강국을 총적 목표로 제시

- 7차 당 대회 통해 핵무기에 기초한 통치전략 구상 및 당 노선 제시 가능성
 - 기존의 핵·경제 병진노선의 구체적 성과와 목표 형태로 ‘핵보검과 문명강국’이 통치전략 구상에 중요한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음.
 - 4차 핵실험 직후 “정의의 핵보검과 문명강국을 더하면 그것이 바로 천하제일강국”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 당의 병진노선의 승리”라고 주장

- 선대의 업적과 김정은의 업적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병진노선’에 기초하여 당 대회 총화와 향후 당면 목표 제시 예상
 - 당 대회 성격상 6차 당 대회(1980년) 이후 현재까지의 성과를 총화하기 위해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관통하는 업적 필요
 - 과거의 ‘병진노선’에 기초한 현재의 병진노선이 올린 성과를 총화하고 핵무력에 기초한 문명강국(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총적 목표로 제시

(3) 권력진용 세대교체 및 당조직 개편과 국가조직 정비 후속작업

- 김정은 정권 집권 2기 진용 공개와 당조직 개편 및 세대교체
 - 올해 상반기 당 대회 전후로 대규모의 세대교체, 인적 물갈이를 통한 김정은 시대 인적지지 기반 공고화
 - 김정은 정권 들어 진행되어 온 핵무기 고도화 관련 조직(당 군수 공업부, 131지도국, 제2경제위원회, 제2자연과학원, 원자력공업성)의 세대교체 수준도 일정 부분 윤곽이 들어날 가능성
- 권력 전반의 세대교체에 따른 후속적인 국가조직 정비 진행 가능성
 - 당 조직지도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청년조직 등 통치의 핵심조직 이외의 국가기구와 군사부문 조직 정비 진행 가능성
 - 당 대회를 통해 새롭게 정비된 내부체제가 본격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내부조정 기간이 필요

(4) 대북제재에 따른 외화벌이 창구 위축과 중장기 경제계획 제시 지연

- 대북제재로 인한 공식 무역규모 감소에 대응한 외화벌이 창구 다각화 모색
 - 대북제재 충격을 완충하는 무역 창구 다각화 및 비공식 경로 활성화 노력이 예상되나,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외화수입 창구 위축
 - 권력기관 명의 무역 경로에서 비공식적인 민간 무역 경로 활성화하고 중국 지방정부와 민생 경제 차원의 경제 교류협력 확대 모색

- 대북제재에 따라 개방적인 중장기 경제발전계획보다 ‘병진노선’의 원칙적 고수 형태로 보수적 경제정책 가능성
 - 당 대회를 통해 중장기 경제발전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으나 대북제재 국면을 의식하여 보수적인 ‘병진노선’식 경제정책 지속
 -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경로로 시장에 대한 공식·비공식적인 허용 폭을 넓히고 민간 시장 활동 활성화를 통한 경기 침체 최소화 노력

(5) 핵무기를 기축으로 한 사회 결속 강화: 자강력·인민·청년

- 4차 핵실험 이후 ‘수소폭탄보유국민’으로 주민들을 호명하며 핵무기를 체제결속용으로 적극 활용
 - 북한 노동신문(1.19.)은 “1월 6일 10시의 수백만분의 1초와 함께 우리는 수소폭탄보유국민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주장
 - 핵실험과 당 대회, ‘자강력제일주의’를 담론적으로 연계하여 이후에도 체제결속용으로 활용 예상
- 시장세대와 청년 친화적 정책 지속
 - 2015.10. 당 창건 70주년 연설 및 2016년 신년사를 통해 김정은은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 등 당의 3대 전략과 ‘청년강국’을 강조
 - 제7차 당 대회는 물론 향후 청년들을 체제 보위세력으로 끌어들이는 청년 친화적 정책이 나올 가능성

2. 남북관계 차원

가. 정세 총괄

- 2016년 남북관계는 ‘강 vs 강’ 대립의 공격적 상호 탐색 구도
 - 북한은 최소 2016.5. 7차 당 대회 시까지 대남 공세적 태도를 취하며 내치에 힘을 기울일 것임.
 - 한국 역시 4.13. 총선을 전후로 내부 문제에 역량이 집중될 전망
 - 3.2. 유엔 안보리의 ‘역대 최대의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후 그 영향을 진단하기 위한 남북 간의 긴장 고조 국면 전개

-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후 북미 간, 북중 간, 남북 간 대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
 - 북한이 한국과 중국, 미국 등 국제사회를 떠보기 위해 게릴라식 대화 국면을 조성할 가능성
 -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전후 과정에서 각 국의 실용주의적 신현실주의 국제정치 행태 팽배

-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이 모두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행보
 - 세계적 경제위기 징후 및 주요국의 현실주의 행태 고도화로 현재 동북아 ‘위기관리 질서의 판’을 바꿀만한 상황은 전개되지 않을 것임.
 - ‘비핵화-평화협정’을 연계한 북과의 대화 필요 흐름이 제기되고 있으며, 각 국 내부 강은 양진영 모두 전쟁 상황을 원하지 않음.

- 그러나 구조적으로 최소 2017년까지 '남북관계 긴장'은 지속될 전망
 - 핵을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에 전략적 무기로 활용하려는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
 -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북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한국 정부의 대북 원칙
 - 복잡한 국가 간 갈등 및 타협이 지속되며 현상 관리를 벗어나기 어려운 동북아 국제정세

나. 정세 전망

- 2016년 상반기 북한 도발의 두 가지 가능성
 - 북한이 5월 7차 당 대회 이후 국제전략을 모색하면서 내부 문제에 역량을 집중하며, 대외적으로는 동해안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 수준이나 정치수사학적 비난 중심의 '저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
 - 7차 당 대회를 위해 '70일 전투'에 돌입한 북한이 대외적으로 대북제재에 저항하며 대내적으로 충성 및 응집력을 높이기 위해 천안함·연평도 사태와 같은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
-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후 2016년 하반기 이후 남북한 사이에 대화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남북관계의 가시적 개선은 어려울 전망
 -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 필요에 따른 '전략적 상호작용'에 의해 극적 화해 흐름이 조성될 가능성
 - 북한은 2016년 한국의 총선과 연이은 대선 국면에 '통일전선전술'을 강화하며, 우리 사회 내부에 대북정책 전환 요구를 높일 것임.

-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행보를 볼 때, 김정은 정권의 단기, 중기, 장기 대외·대남정책의 실질 목표
 - 단기(5년 기점): 김정은 집권 5년 이내(2012~2016년) 핵기술 및 군사력을 발전시키며, 주변 환경을 권력 공고화에 유리하도록 조성
 - 중기(10년 기점): 2020년 전후로 중기(中期) 목적은 (목시적으로)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대외 경제제재 완화, 국제사회의 외자유치 및 대북지원 유도
 - 장기(15~30년): 김정은이 경제발전과 핵무력을 모두 갖춘 '강성대국'의 최고지도자로 자리 잡고, 대내외적으로 김일성·김정일보다 더 위대한 수령으로 인정받는 것임.

- 7차 당 대회 이후 북한의 중기(10년 기점) 대남전략 가동 가능성
 - 5월 당 대회를 통해 그간 대남·대외정책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중장기 대남전략을 제시
 - 하반기 이후 북한 대외전략의 중기(中期) 목표인 '(목시적으로라도)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및 그와 연동된 대외관계 개선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 한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을 이끌어 내며 대외 경제제재 완화'를 추진할 가능성

3. 동북아 차원

가. 정세 총괄

○ 역내 주요국들의 전략적 딜레마 발생

- 북한의 핵 위협의 증가로 인해 한국 뿐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해가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른 딜레마가 발생함.
- 한국의 경우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였고, 미국은 한일의 실질적 확장력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자원을 동맹관리에 투자해야만 하는 환경에 처했으며, 중국은 대북 영향력의 실질적 보유 및 강행 의지 그리고 효과에 대해 입증해야만 하는 전략적 부담이 생김.
- 역내 강대국들이 딜레마로 인해 주요 결정(decisive decision)과 이에 따른 자원 투입을 주저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결국 북한이 핵을 고도화할 수 있는 시간적 환경을 부여할 수 있는 손실 환경(cost environment)이 조성되었음을 의미

○ 강력한 대북 강압 연합 형성

-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함으로써, 한국을 포함한 역내 강대국들이 북한을 사실상 제재로 봉쇄하는 '5 對 1 강압 구도'가 형성
- 유엔 안보리 제재안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대북 압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한국과 미국 그리고 EU를 비롯한 개별 행위자들의 강력한 독자 제재들이 다자적 제재와 동시 병행됨에 따라, 과거 대

북제재 국면에 비해 제재의 그물망이 훨씬 촘촘해짐.

○ 동북아 국제관계의 불확실성 증가

- 미국이 전략자산 등을 동원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으며, 4월 말까지 '작계 5015'를 반영한 한미연합훈련이 최대 규모로 전개될 예정이므로, 북한이 이에 대응해 군사적 수단을 활용한 강경 대응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4차 핵실험 이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주한미군 설치와 관련해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이후 증진되었던 한중 신뢰 관계 또한 위협에 처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속

○ 한반도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성과 불안정성 증가

- 북한이 수소폭탄 보유 이전 단계인 소위 '증폭핵분열탄' 시험에 제한적으로 성공하였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를 통해 증강된 미사일 능력을 보여줌.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수준이 소형화 및 경량화 수준에서 상당히 고도화된 것을 의미
- 이는 북한이 다량 보유한 스킵드 미사일(SRBM) 및 노동 미사일(MRBM)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 특히 북한이 노동 미사일(사정거리 1,300km 내외)에 소형화된 핵탄두(1ton 내외)를 탑재해 북한 후방에서 한국을 타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위협 수준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증가
- 이번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로 김정은 정권은 핵 강압전략을 취하고 있음이 판명됨. 이는 향후 북한이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상당히 공세적인 외교 및 대남관계를 전개할 것으로 추론

가능케 함. 특히 존재감 과시 및 전략적 가치를 시위하고자 갖은 도발을 강행할 경우 한반도는 상당기간 불안정 국면에 직면할 수 있음.

○ 국제사회의 비핵화 진전 가능성이 상당 기간 난망

- 북한의 핵 보유 의지가 강경하며,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에 대해 협상할 의지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 북한은 최근 북미 평화협정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피력한바 있음. 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평화협정 제의는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간 벌기와 자국의 국제적 위신을 고려해 책임을 미국에게 전가하기 위한 전술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
- 핵동결 및 비핵화 과정에 드는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점도 또 다른 중요한 이유. 북한은 ‘자칭’ 수소탄 능력을 기준으로 핵동결 및 비핵화에 대한 대가를 예전에 비해 훨씬 높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동시에 북한의 레버리지가 높아졌음을 의미. 따라서 비핵화를 요구해 온 중국에게도 저항할 가능성이 높음.

나. 이슈별 분석

○ 대북제재의 효과

- 제재의 내용 및 강도·북한의 취약성·제재 참여 주요국들의 의지를 고려하면 금번 대북제재는 과거에 비해 실효적 효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하지만 제재의 궁극적인 성공 여부는 제재의 목표 수준·제재 유지 기간·중국의 협조 여부 등에 달려 있음.
- 특히 제재의 목적을 높게 설정할수록 효과 달성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짐. 통상 국가의 ‘생존(survival)’과 관련한 중대한 전략

적 이해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는 경험적으로 효과가 지극히 낮음. 따라서 김정은 정권이 제재를 감내하겠다는 결기로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북한이 제재에 대한 오랜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북한 수뇌부에 대한 직접적 압박 수단이 여전히 여의치 않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제재에 대한 목표를 신중히 전략적으로 설정해야만 함.

- 제재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제재 공조'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한국과 미국이 세심한 노력을 해야만 할 것임. 하지만 이에 대한 도전 요인이 적지 않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 적용으로 인한 중국기업의 타격을 장기간 용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특히 동북 3성지역의 경제적 타격 등을 고려해 북중 밀무역 차단과 같은 좀 더 적극적인 협조를 보일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음.

○ 고고도 미사일방어체제(THAAD)

-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국에 대한 시급하고도 직접적 안보 도전이라고 판단해 사드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그 결과 한미 양국은 공동실무단을 발족하여 사드 배치 일정과 장소, 비용 등에 대한 본격적 협의를 가동
-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반입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하지만 중국이 사드를 이유로 대북제재 보이콧을 주장 및 실행하지 않았고, 미국 또한 한미 간 논의의 속도를 조절하는 등, 양국이 사드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통제하려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무엇보다도 사드 문제를 이유로 한·미·중 북핵 3국

공조가 균열이 가지 않도록 대중 외교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북핵 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한 사드 배치를 진지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중국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임.

○ 새로운 북핵 해법

- 현재 미국은 공화·민주 양당 모두 북한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에 대해 큰 반대가 없으며, 오히려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징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
- 하지만 향후 미국이 새로운 북핵문제 해법을 채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음. 2015년 하반기 이후 미국 내에서 소위 '3-No policy'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로 목표를 하향 조정하여 북미 간 협상을 해야만 한다는 주장임. 즉, 북한의 추가 핵무기 배치 금지·핵무기 성능 개선 불허·핵무기와 기술의 이전 불허를 핵심 내용으로 북한과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오바마 행정부도 집권기간 동안의 대북정책 목표를 북핵 동결로 하향 조정하고 궁극적 비핵화 달성은 차기 정부로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최근 중국이 비핵화 논의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다루자고 주장하고 있는 점 또한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며, 중국이 한반도 레버리지 유지 및 강화 차원에서 이러한 주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 단, 현실적으로 비핵화 요구 수준·비핵화 조치 결과와 평화협정 간 선후의 문제·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평화협정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관련국들의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한미동맹

- 북한의 추가도발(특히 국지적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미국의 전략자산 동원 및 단호한 의지표명이 더욱 긴요한 상황이 도래. 따라서 미국이 대북제재 국면을 주도하며 한반도 및 동북아 역내에서 발언권을 높일 것으로 예상
- 당분간 미국의 역내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 공약 및 가시적 노력이 배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즉, 한미연합훈련 등에 전략자산 무기체계를 동원하여 북한을 압박하고 일본에 대한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관련 후속 조치가 있을 가능성 높음. 이는 한국과 일본이 현실적으로 미국의 외교력과 실질적 확장 억제 능력에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음을 의미. 또한 한국의 독자적 대북 억제력 구비가 상당히 미비하며 그 효과 또한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성 증가에 대한 중요한 이유임.
- 특히 중국을 제재 국면에 동참시키는 능력 또한 현실적으로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점도 미국의 레버리지 상승의 부가적 이유임.
- 한국이 대북 강압의 수준을 높이는 것에 대한 현실적 한계가 있음. 군사적 강압 실시 가능성이 낮고 설사 강압을 하더라도 그 효과를 장담하기 힘들기 때문임. 특히 한국의 주변 강대국 설득에 한계가 있음. 결국 한국이 한미동맹에 중·단기간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함. 이는 동맹 관리 비용의 증가를 의미

V. 정책적 고려사항

- 4차 북핵실험과 관련, 한국은 대북 제재안의 실효성 확보, 북한의 추가도발 억지, 한국의 주도권 확보라는 세 가지 전략 목표하에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
- 국제적 수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
 - 2016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2270이 2013년의 결의안 2094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
 - 사안의 시급함을 고려해볼 때, 유엔 회원국의 제재이행보고서 제출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1718위원회의 추가적인 권한 부여를 고려해야하며, 전문가그룹(POE)의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노력 경주
 - 한·미·일 간의 제재이행 소다자 협력도 고려해볼만하며, 중국 이외 북한의 무역교역국이 포진된 동남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제재이행을 더욱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지역적 차원의 협력 강화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함.
 - 5자회담(혹은 6자회담) 관련국들 간 제재 내용, 제재 이후의 공조 유지 방안, 북한 비핵화 협력 메커니즘에 대해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의 전략대화를 강화
 - 특히 5자회담 및 6자회담과 같은 비핵화 틀 재건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제재 강화 및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접근 필요
- 북핵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다자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야 하는바, 한·미·일 협력과 한·미·중 협력의 복합 구축과 관련해 2가지 전략적 측면에 유의해야 함.

- 첫째, 한·미·일 3국 협력이 대중 견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유의. 이는 한·미·중 3국 북핵 협력 유지의 관건
 - 둘째,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 3국 간 협력 구축에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
-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강화된 대북 제재가 이행되도록 유의함과 동시에 향후 가능한 대북 협상의 준비가 필요함.
- 대북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굴복할 가능성은 매우 적으며, 제재의 효과는 결국 협상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음.
- 북핵실험 이후 한미동맹 강화가 한중협력의 훼손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세밀한 한중관계 관리가 필요함.
- 한국의 이익에 있어서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의 동시 추구의 중요성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불변
 -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재 및 협상 모두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함.
 - 미국은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재균형 전략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요구할 수 있지만, 한국은 '종합적인 실익'을 고려하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
-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대북 제재안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설득 지속

- 실질적 대북 압박 효과를 위한 엄격한 이행 추진 촉구
 - 특히 중국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및 이행 부처에 대한 성실한 감독 관리 필요성 강조
- 한중관계 관리 차원에서는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제로섬 관계가 아님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대중 균형외교 및 레버리지 제고 노력
- 기존 한중 4개 전략대화 체계의 심화 발전 재강조 및 한중 안보협력 확대 요구
 - 특히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간 고위 전략 대화 채널 심화 발전 추구
- 사드 배치 논의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 입장 견지 및 대중 설득 논리 개발
- 사드 배치 논의는 한국의 안보적 고려에 따라 결정된 자위적(주권적) 조치임을 강조
 - 동시에 사드 배치가 중국의 이익에 위협이 되지 않음을 이해시킬 구체적 논리 및 설명자료 개발
 - 전략적으로 사드 배치의 최종 결정에 대한 속도 조절 고려
- 한국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한 ‘갈등’과 ‘협력’ 요인이 충돌하지 않는 전략적 외교의 추진이 필요
- 한국 정부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주변국 모두와 협력한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홍보해 나갈 필요

- 일본의 아베 정권은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실험이 박근혜 정부의 대중국 접근 정책의 실패라고 규정하고, 한국의 ‘중국제사론’이라는 기존 일본 정부 주장의 정당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음.
-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는 한, 북한 팩터의 전략적 활용 기조를 유지할 전망
-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가 북핵 문제 해결에서 한미와 공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 전망을 갖고 러시아의 협력을 견인할 필요
 - 굳이 북핵 문제가 아니더라도 한러관계의 신뢰 회복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임을 직시하고 정상 간 채널을 비롯한 다양한 대러 네트워크 확대에 주력
 -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의 국익을 저해하지 않으며 편익을 제공한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러시아를 설득
-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주변 안보 위협을 해소하는 데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
- 북핵 능력 고도화로 인해 가장 큰 위협을 받게 되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부각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공조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제3자가 아닌 당사자라는 사실을 북한 및 주변국에 적극적으로 인식시킬 필요
 - 남북관계 역시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신뢰 상실의 위기 속에서는 근본적 개선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북한으로 하여금 인식하게 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

- 유엔 등 다자 차원의 공조를 통한 제재 이행과 동시에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갖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
 - 한미동맹, 한일공조, 한중 및 한러협력을 통한 북핵 문제 대응 기조는 불가피하다는 인식 아래 다자 차원의 북핵 대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위치를 상실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미중 타협을 통한 ‘거대 협상(mega deal)’을 통해 한국을 배제한 북핵 타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관리하며 1.5트랙 차원의 한·미·중 북핵 대화 추진

- 대통령 및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전단 살포 등 ‘대남한 정부 공격’에 맞서 ‘대북한 주민 심리전’ 검토
 - 민주적 정통성을 결여한 권위주의 체제와 달리 북한의 한국 정부 비난에 호응할 국민들은 없는 만큼 국민통합적 대북정책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여론이 양분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
 - 대남 비난에 앞장서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소수 엘리트와 핵개발로 인한 국내적 자원 배분의 왜곡으로 인해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책을 분리해 대응할 필요성 강조

- 박근혜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대표 브랜드인 통일준비 작업은 북핵 문제로 인한 긴장 고조와 완화 국면 속에서도 일관성 있게 지속될 필요

〈부록〉 4차 북핵실험에 대한 주변 4강의 반응1)

1. 미국

1. 북한 비핵화 전략 평가와 전망

- 이번 핵실험을 통해 북한은 다시금 핵무장의 길을 택한바, 이제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인가 임.
 - 지난 20여 년간 북한의 핵보유를 막기 위해 시도했던 모든 외교, 군사, 경제원조 조치 등은 모두 실패했음.
 - 이번 핵실험 이후 미국과 한국 정부 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응, 즉 더 강력하고 정확한(pointed) 조치의 필요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듯함.
 -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는 국제사회 모두의 책임이며, 북핵문제를 다룸에 있어 어느 한 국가의 책임으로 비난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위임.
 - 또한 이제는 북한의 붕괴를 가정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려 들면 안 될 것임.
- 이제까지 북한은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를 견지는 않았음.

 - 1)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미중일러 등 주변 4강의 연구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워크숍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들의 발언은 해당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북핵 문제의 인식과 해법에 대한 해당국 전문가들의 견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논의 내용을 요약소개한다.

- 이란, 미얀마, 시리아, 브룬디, 벨라루스, 짐바브웨 등은 북한보다 훨씬 광범위한 인명/단체(entities)에 대한 제재를 취해왔음.
 - 북한은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를 명분으로 그 어떤 인명/단체도 제재명단에 올려지지 않았음.
 -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오해임. 미국은 제재조치를 통해 미국 법령을 강제하고, 제재대상국에 피해를 주고, 금지된 품목 수입에 제약을 두며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고자 함.
- 한국이 금번 북핵실험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음.
- 1) THAAD 배치 2) 미사일 방어체계를 더욱 광범위한 미국동맹 방어체제에 통합 3)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4) 개성공단 가동 중단 5) 북한인권법 통과 6) 대북정보활동 증가
 - 개성공단은 장기적으로 북핵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소이며, 정치경제분야에서 북한변화를 유도하지도 못했음.
- 미국의 대 아시아 공약은 2016년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유지 될 것으로 보임.
-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했으나 거부당했음. 미얀마, 쿠바, 이란과 달리 북한은 변화의지가 없으며, 현재의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고 생각함.

2. 금번 대북제재에 관한 미국의 입장과 기대

- 중국은 장기적으로 핵을 보유한 북한과 공존할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미국은 중국과 협력하는 것 이외에 다른 조치도 준비해야 할 것임.
- 한미 양국은, 중국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유엔에서의 대북제재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거나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임.
-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미국의 대북제재의 의도와 결과를 구분해야 할 것임. 미국의 양자제재는 대부분 중국에 집중될 것이지만, 이는 중국이라서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재 대상이 북한을 돕는 단체여서 제재를 하는 것임을 주지해야 할 것임.
- 또한 저성장의 국면에 놓인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나날이 확대되는 국제금융협력을 지속할 것인가를 놓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를 기대함.

3. 한중관계 발전에 관한 미국의 입장

-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있으며, 관계강화는 좋은 일임.
- 한중관계 발전은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논의일 것임. 물론 미국과도 이러한 대화를 해야 함. 삼자대화형식이 될 수도 있고, 두 개의 양자대화가 될 수도 있음.
- 이러한 한반도 미래에 관한 논의의 결론은 바로 민주적인 통일한

국이 한반도 전체를 통치한다는 데에 있어야 할 것임. 또한 통일 한국이 중국의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하며 이런 논의가 있을 때까지 한국은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한중관계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문제가 될 수 있음. 즉, 중국과의 관계를 위해 안보를 희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통일한국은 분단된 한국보다 미국과의 동맹이 더욱 필요할 것임.

II. 중국

1.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 4차 북핵실험으로 인해 중국 내 북한 부담론과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 중임.
 - 북핵 및 북한 피로감으로 인한 중국의 대북 관리 필요성 증대
 - 핵오염, 백두산 화산 폭발 등에 대한 우려
- 북핵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평가 절하하는 분위기이며, 아직까지 북한의 핵동결을 위한 협상의 가능성과 시간이 있다고 판단함.
 - 한·미·일이 북한의 핵기술 수준을 과대 해석한다는 시각
 -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하면 북한과 협상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인식
- 한·미·일 삼각안보협력 강화 추세 및 한국의 사드 배치 가능성 등 미국의 MD 체계 및 대중 안보 프레임 강화에 대한 우려가 강함.
 -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전통적인 전략적 의구심 제기
 - 한국에 대해서도 중국의 안보적 우려에 대한 이해 촉구

2.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시각

- 중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하고 북한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국제사회와 마찬가지로 제재조치를 시행

- 해 왔는바, 향후에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협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북한에 대해 물자 중단, 송유량 제한 등의 조치 검토 가능
 - 한중관계를 고려, 북핵문제에 대한 한중 공동성명도 고려 가능
- 중국은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협조할 것이지만, 제재의 수준이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해치는 수준(붕괴)까지는 희망하지 않을 것임.
- 과거보다 강도 높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 실행은 동의
 - 중국의 비공식적 단독 제재 및 압박 가능성 시사
 - 단,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출구전략 마련 역시 중요
- 북핵 해결의 지연은 미국의 책임이 크며, 중국 역할론 혹은 책임론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적이 과도하다고 인식함.
- 4차 북핵실험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에 기인
 - 중국의 신중한 접근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우선하기 때문임(전쟁 방지).
- 중국은 북핵 해결을 위한 기존의 3원칙을 견지하며 6자회담의 틀을 통해 점진적 문제 해결을 희망함.
- 비핵화, 한반도 평화안정, 대화해결의 원칙 유지
 - 5자회담 등 새로운 협의 형식보다는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문제 해결 희망
- 한국 역시 단독 혹은 제3국과 연합해 북핵문제에 대응할 때 중국

의 안보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정책 선택을 하기를 희망함.

3. 한반도 통일 관련

- 한국은 한반도 통일에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 같으나, 한반도 통일은 중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님. 북한이 이를 반대하고 있고, 만약 중국이 북한 편을 든다면 한국 역시 이를 반대할 것이기 때문임.
- 그러나 한국 주도의 통일 가능성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로 인한 불안정성과 북핵 등 북한의 군사모험에 따른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이 심화되면서 높아질 것이라 예상됨.
 - 북중관계의 악화 및 4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 향후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정권은 더욱 고립되고 정권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
- 중국 정부는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언급하지 못하고 있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인바, 향후 관련국 간의 1.5트랙 차원에서 이에 관한 협력 모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Ⅲ. 일본

1.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에 대한 시각

- 북한은 북중관계의 손상을 각오하고서라도 미국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4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판단됨.
 - 북한 경제가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섰지만 시장경제 요소가 도입된 이후 저성장이 지속되는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난에 직면한 상황임.
 - 따라서 중국과 지속적 협력이 필요하지만,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으로 미국과 더 높은 수준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가 잠깐 악화되는 것도 감수해야겠다고 판단
- 4차 핵실험 이후에도 추가 도발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음.
 - 4차 핵실험은 김정은의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에 개발하지 못했던 수소폭탄을 보여줌으로써 이것을 성과적 측면으로 당 대회에서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임.
 - UN 제재 이후에도 당 대회 전까지 또 다른 액션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음. 즉 추가도발 가능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음.
- 7차 당 대회 개최 시기는 김정은이 전체적인 대내외 타임스케줄을 토대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음.
 - 대내적으로는 국내 권력구조 측면에서 조직 및 숙청을 통한 세대 교체 완료
 - 대외적으로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당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그 전에 당 대회의 실적이라 평가할 수 있는 핵실험을 미리 진행한 것으로 판단됨.

- 최근 한국 내 핵무장론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핵무장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대안으로 가능하다고 봄.
 -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가가 중요
 - 이란 핵협상과 비교하면, 북한 핵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같은 역할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이란과 협상을 시도했음.
 - 동북아에도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가 필요함(crazy Israel). 즉 한국도 핵무장을 진지하게 생각할 것을 제안하는 바임. 한국이 핵무장 태세에 들어간다면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도 자극을 받아 결과적으로 미국이 북한과 진지하게 협상할 가능성이 증대됨.(일본 측 일부 참석자)
 - 역대 한국 정부는 지역과 세계 안보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한 적이 없음. 또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충분히 지키고 노력해 왔으며 이는 동북아 안정에 크게 기여했음. 따라서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은 희박함.(한국 측 반론)
- 한중관계는 한·미·일 협력 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절대 아님.(한국 측 설명)
 - 한국이 중국의 대북 정책에 많이 의지하고 기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100% 성공한 대북 정책이 아니라고 해서 나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함.

- 한·미·일 협력이 대북 정책의 기본임은 분명하지만 그 동안 결과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기에 중국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음.
 - 즉 중국의 태도가 우리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것임. 한미관계를 계속해서 강화하면서 중국을 활용하는 여지를 두자는 것이 핵심임.
- 남북 대화의 재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한국이 주도하는 대화 국면의 필요성은 있음.
- 목적이 같더라도 방법론이 잘못된 경우 해당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움. 지금 상황에서 평화협정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북한 핵실험이 이를 불러왔다는 착각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한국 정부 입장에서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 그렇다면 외부 요인이 한국 정부에 영향을 미쳐 남북대화의 재개 국면을 열어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은 평화협정 제의에 대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고, 위안부 문제 타결 및 북핵실험의 여파는 한·미·일 협력 구도를 강화시키고 있음.
 - 이것이 한국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의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어 보임.

2. 한일관계 및 일본의 대북 정책에 대한 시각

-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엄격할 수밖에 없음.
- 일본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제재 결의에 집중할

것임. 그 외에 독자적인 제재 강화를 추진 중임.

- 가능한 한 강압적인 자세를 나타내는 것은 필요하나 대화 창구를 닫지는 않을 것임. 일본은 7월 참의원 선거 전에 적극적 행동을 취하기 어렵고, 북한 역시 선거에 불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임.

○ 일본의 대북 독자적 제재는 2014년 해제된 제재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주는 의미가 있음.

- 2014년 일본이 해제한 제재는 모두 큰 의미가 없으며 중요하지 않았던 제재들을 해제한 것이었음.

- 일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무역 관련 제재조항의 해제이고, 특히 '만경봉 92호'와 같은 북한 선적 입항 금지 제재를 해제할 때에 비로소 상당 부분 제재를 해제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임.

○ 2016년 한일관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 그러나 아베 정권이 역사수정주의를 추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움.

- 한일 양국이 북한 핵실험 관련 엄중한 책임 추구, 위안부 문제 합의 평가, 향후 안보적 측면에서 협력 추진 등이 긍정적인 평가로 보임.

- 하지만 '아베 정권 역사수정주의'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으며, 전후 체제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베 정권이 아닌 중국 정부임.

IV. 러시아

1. 북한 경제 평가

- 지난 2년간 언론에서 북한 지도부가 경제개혁에 나서고 있다는 루머가 돌았으나, 오직 노동당 지도부만 체제의 위기를 느끼고 수출을 증대하려고 했을 뿐, 개혁조치는 별로 없었음.
 - 북한 정권은 경제 발전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이고 현 경제제도로는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없음.
 - 북한 경제의 현실은 중국 경제의 발전 경험을 추구하기보다는 스탈린 하의 소련 정권에 가까움. 총생산의 60%는 군사 부문, 30%는 농업 부문, 나머지 10%만이 민간 부문임.
 - 농업 생산량은 자국민들을 먹이기에 부족함. 또 민간 부문은 내부 수요가 없고 시장제도가 부재하여 발전이 더딤.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부정부패로 얼룩져있고 비공식 경제가 활발함. 신흥계층과 국가 권력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외국인을 위한 투자 환경은 불확실함. 세제 감면 혜택이나 관세 관련 혜택을 주어도 생산수단, 자산, 지적재산권에 대한 담보가 없고, 국유화의 위험성도 있음.
 - 일례로 북한에 진출한 이집트 통신회사도 국유화되었고 이에 대해 비공식경제와 40배 차이 나는 공식 환율로 보상하려고 하였음.
- 대부분의 수출은 개성공단과 라진 항구를 통해서 이뤄짐. 이마저 4차 핵실험과 광명성 4호 발사로 한국은 지원을 거부하는 상황인

되었음. 러시아 또한 남·북·러 삼각협력에 대해 자제하는 방향으로 돌아섰음.

2. 북중관계 평가

-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장성택 처형 이후 거의 중단된 상태임.
 - 아울러 중국사업자의 자산 국유화, 북중 국경에서 북한 병사의 살인 행위로 더욱 악화되었음.
 - 조선족을 통해 이 관계를 복원하려는 시도들이 있지만 중국은 새로운 노선을 모색하고 있음.
- 중국은 6자회담 당시 존재하던 북한의 친중 로비가 사라진 후,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하기를 포기한 듯 보임.
 - 대신 미국,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을 완충지대로 고려하는 것을 중단하는 타협안을 모색하고 있음.
- 통일한국이 신흥 시장경제 국가로 존재하는 것은 중국의 국가전략인 일대일로의 이익에도 부합하는바, 중국은 자국에 호의적인 경제 및 정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전략을 재고하고 있음.

3.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 한반도 통일은 시장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합리적임.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터무니없음.
 - 북한의 최근 적대적인 태도를 볼 때 그와 관련된 논의는 더욱 가

치가 없음. 현재는 이산가족 문제, DMZ 운영 문제, 그리고 제한된 경제협력이 더욱 의미 있을 것으로 보임.

-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생명의 가치는 돈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기에 북한을 상대로 한 어떠한 군사작전 시나리오도 배제해야 한다는 점임.
-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거론되지만, 현 상황에서 정권은 안정적이며 주민 폭동은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간헐적 수준에 그치고 있음.

4.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도 평가

- 북한은 앞으로도 핵과 미사일 개발 노선을 지속할 것임.
 - 이 노선은 북한이 정치적으로 미성숙하고, 적대적이라 생각하는 국가의 도발에 민감하기 때문에 냉전적인 사고에서 결정된 것임. 즉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군사적 목적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님.
-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주변국의 억측과 불안감을 확산시키기 때문에 위험함.
 - 미국은 아태 지역에 전략배치를 증가시키고 한국에 병력과 무기, 시설을 증강할 것이라 천명했음.
 - 일본은 자신의 군사력 확장 정책을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기인한 것으로 정당화함.
 - 이러한 행동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쳐 역내 안정을 해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다른 하나의 위험성은 북한의 핵시설이 소련의 설계를 차용하였기 때문에 노후화되었고, 전문가들의 수준조차 높지 않아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 없이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임.
- 러시아는 안보리 제재와 핵 비확산의 절대성을 주장함. 러시아는 북한이 핵 비확산조약에 재조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보장 아래 북한의 핵시설이 관리되며 19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이행할 것을 지지함.
- 러시아와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입장은, 유엔 안보리와 각국의 독자 제재는 핵실험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에서 북한의 적대적인 행동을 유도하여 핵실험을 촉발했다는 것임.
 - 핵 비확산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해야 하지만 그 강도와 수위는 생각해 보아야 함.
- 일부 학자는 이란의 사례처럼 위기가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이란은 핵실험을 하지도 않았고 경제개발에 관심이 있었으며 유럽 및 중동과의 지리적인 접근성도 있었음.
 - 이란과 달리 북한의 대응은 예측할 수 없음.
- 3+1(한·중·러+북한) 협상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한반도의 상황 악화로 이득을 보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역내 균형을 깨려는 미일과의 협력은 정당하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함.
 - 북한은 유럽에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서 유럽의 도움은 기대하기 어려움.

- 북한의 최우선과제는 정권의 안전보장이며 그들의 안보관은 원시적인 수준임.
- 북한의 핵은 억제수단이지 공격수단이 아니며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것을 인정한 상황에서 상대해야 함.
- 한반도에 너무 많은 행위자가 있는바, 미국이나 중국이 주도하지 않도록 해야 함.

5. 사드 배치 문제

- 한국이 제2의 터키가 되지 않기를 바램. 사드는 중국만큼은 아닐지라도 러시아에게도 민감한 문제임.
- 러시아에게 사드는 큰 위협은 아니지만 역내 환경에 변화를 줌.
-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예측하기 힘들. 중국은 미국으로 발사할 수 있는 핵 탑재 미사일이 없음.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대응할지 예측이 불가능함.
- 사드 관련하여 중국을 조심할 필요가 있음. 시진핑 주석이 당내의 군부 세력의 로비로 인해 강경 입장을 취할 수 있음.
- 사드는 미군 기지를 방어하는 데에만 도움이 될 뿐 한국에는 도움이 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Iron Dome)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제한된 민간지역 방어 시스템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한리는 우주 개발 분야에서도 협력한바 있으므로 이를 확대하여 미사일 방어에도 협력할 수 있음.

6. 전망 및 제언

- 러시아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관심이 많음.
 - 러시아는 여전히 자국의 동방정책,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중국의 일대일로 의 틀에서 남·북·러 협력에 관심이 많지만, 경제 및 투자 활동은 북한의 정치적인 행보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가능함.

-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포함한 다자 안보 협정이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임.
 - 미국은 위기상황을 조장하거나 한반도에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이나 전략적인 핵 배치를 하지 말아야 함.
 - 북한 지도부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방안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법적 효력을 가진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는 것임. 여기에는 내정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도 포함되어야 함.
 - 북한이 핵무기야말로 물리적 안전 보장을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한, 완전한 비핵화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되, 실험하거나 배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
 - 북한은 수입이 생기면 군사부문 투자를 우선시하지만, 안보 위협이 사라지면 지도부가 민간부문에 더 신경 쓸 것임.

-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은 북한의 지도부가 안정이 되어야 경제협력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임.
 -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북한 사회에서 새로운 가치의 부상이 평화적인 해결의 기회를 제공할 것임.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통일나침반 16-04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최진욱
편집인 통일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 02-2023-8000
팩스 : 02-2023-8297
인쇄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전화 : 02-2269-9917
인 쇄 2016년 03월
발 행 2016년 03월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